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2019.12
~ 2020.12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합본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Editor's Letter

송교성(문화정책이슈페이퍼 편집위원,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
송진희(문화정책이슈페이퍼 편집위원,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이지훈(문화정책이슈페이퍼 편집위원, 필로아트랩 대표)

p03

창간호(2019.12.)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 삶과 사회의 밑그림- 문화비전]

p07

제2호(2020.1.~2.)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p22

제3호(2020.3.~4.)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

p37

제4호(2020.5.~6.)

[코로나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p52

제5호(2020.7.~8.)

[The Art Must Go On-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p73

제6호(2020.9.~10.)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 시민 문화권에 대하여]

p94

제7호(2020.11.~12.)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산형 뉴 리터러시에 관하여]

p115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발간의 의미와 2020 주요 내용 소개

EDITOR'S LETTER

송교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문화예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랫동안 문화예술 정책이 실행되어 왔으며, 대규모의 국제적인 축제 개최나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조성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지원 사업들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전개되어 왔음에도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등의 축적된 연구들을 찾기가 어렵다. 실제로 연구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기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연구이며, 현장의 사례 분석들도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연구 인력이나 연구기관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문화정책을 개선하거나 만들어 가는 데에,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 보다는 수도권의 상황과 현실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고,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출범한 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센터에서 발간하는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이하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책의 동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부산의 문화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실제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하고자, 가급적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전문가 분들을 필진으로 섭외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예술현장과 가장 밀접한 공공 행정 및 지원기관들의 주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웹진 「arte [365]」를 꾸준히 메일링 서비스하고 있다. 현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담고,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함이다.

편집위원들과 센터가 함께 진행한 이슈페이퍼 편집회의는 주요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의 의미와 최신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주제 선정에 고민했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예술인의 사회안정망 문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응하는 뉴노멀 등이 주제로 많이 선정되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은 얼핏 누구에게나 같은 문제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를 통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기획자 분들이라면 이번 합본호에서 예술인복지 정책 관련 글들을 찾아본다면 향후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인터뷰 '예술가가 소외받지 않는 사회안정망의 시작' 기사(2호)는 예술인복지 정책에 대한 개요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책의 목적과 현황을 잘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4호)와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의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4호)를 참고한다면 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제도와 그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과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한 편으로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의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3호)와 김건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에 봄은 왔다.'(3호)는 현재 예술인복지 및 코로나 이후 관련된 지원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각 칼럼 모두 코로나 위

2020년 정책이슈페이퍼의 성과와 과제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부산문화정책의 건강한 담론을 생성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2020년 정책이슈페이퍼가 창간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정책이슈페이퍼는 부산문화정책연구와 국내, 해외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산지역중심의 문화정책을 담아내는 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거시적 관점으로 부산문화예술정책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부산문화예술현장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정책의 관점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이 정책이슈페이퍼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2020년 년 초에 발생한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예산삭감,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예산 전액삭감 등의 상황을 겪으면서 운영주체가 해결 할 문제로 던져질 것이 아니라, 부산문화정책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담론생성이 부재한 빈 공백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책이슈페이퍼에서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2호의 칼럼을 통해서나마 논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처럼 문화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문화정책관점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나타난 예술현장을 통해서 더 절실히 나타났다.

2020년 정책이슈페이퍼는 총 3회에 걸쳐 코로나시대의 예술 현장을 기획하여 지면에 실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달라진 예술 현장의 변화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예술지원의 변화 등 각계각층에서 드러났다. 오프라인 공연, 전시, 축제 등은 중단, 취소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고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진행 방식을 새롭게 고안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창작의 중단과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생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상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달라진 문화예술 현장의 상황에 대해 발 빠른 현장실태와 정책적 보안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각 예술영역으로 흩어져 있는 현안을 모아내는 내용을 정책이슈페이퍼에서 기획하

였다. 예술인복지와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준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연예술현장의 목소리, 국공립기관의 새로운 표준방안, 코로나시대의 예술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처럼 문화예술영역에서 비어있는 빈틈과 사각지대들을 해결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 중 하나이고, 그 역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담론을 통한 활동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정책이슈페이퍼의 역할이 아닐까한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정책이슈페이퍼가 부산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 시선을 담아내면서도 문화예술 현장의 사안을 문화정책관점으로 해석하고 제시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가, 전문가, 기획자, 창작자, 시민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제언을 연결 할 기획과 역량을 확대할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체로서 다양한 세대와 성별로 구성된 필진을 연결함으로써 의제를 생산하는 기획력도 필요하다. 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정책 현안으로 언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필진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력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대담의 형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나가는 부산문화정책의 활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책이슈페이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체감하게 된 것은 부산문화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각기각층으로 흩어져있고 정책현안을 공유하거나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지면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책이슈페이퍼가 앞으로 부산문화정책의 현안을 짚어내고 확산시키는 장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기 속 쏟아져 나온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관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 있다. 현장의 상황과 연결하여, 코로나 이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이슈페이퍼 발간의 첫 해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슈페이퍼의 정체성과 내용,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구성이나 편집 디자인의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도 있다. 향후 여러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아가면서 꾸준하게 이슈페이퍼가 쌓여간다면, 지역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든든한 기초 자료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를 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디자인의 관점에서 창간호와 비교해 보면 그림과 사진이 늘어나고, 인쇄 폰트 크기도 커지며, 가독성이 좋아졌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슈페이퍼'의 발간 취지에 점차 접근해간다는 느낌을 준다.

2019년 문화 생태계의 이슈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에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슈페이퍼 발간 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3호, 4호, 5호는 모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제목을 내걸었다. '예술 활동의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예술 활동' '코로나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술 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여러 필자들이 좋은 글을 써주었다. 특히 인상에 남는 글을 꼽는다면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와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였다. 예술의 공공성, 말하자면 예술 활동의 공공적 성격과 함께 예술에 대한 공공 정책의 의미와 현주소를 곱씹어보게 해주는 글이었다.

5호에 실린 조사보고서 갈무리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도 시의적절했다. 문화를 창조·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공기, 물,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기본권이 비단 예술인뿐 아니라 시민의 몫이기도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예술인 생계보장과 온라인 콘텐츠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지역 문화 생태계의 온라인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하고, 영상 관련 기관(영상위원회, 영화의전당 등)과 문화기관·단체의 협업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한다. 또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역량강화 영상 제작·유통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슈페이퍼가 이 문제를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

당분간 코로나 전염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생

태계의 관점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일시적인 돌발 '변수'로 볼 게 아니라, 적어도 당분간은 고정적인 '상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코로나 사태와 직결된 문화정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으나 부산문화에 중요한 이슈를 차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6호부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앞선 다섯 호들이 혹은 예술인 중심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말하자면 예술인 복지와 예술인 생계 대책에 집중된 나머지 시민들의 문화 창작·향유에 관련된 이슈에는 약간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자성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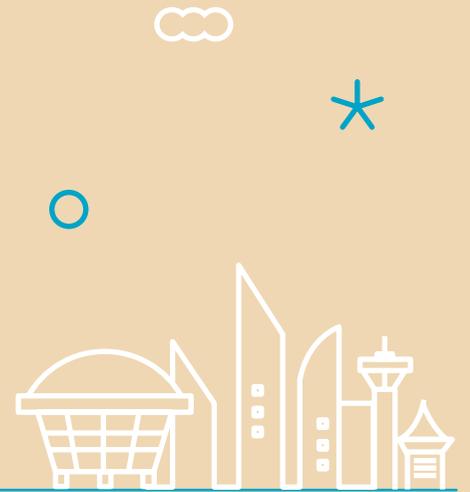
예술 장르에 있어서도 균형이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역은 공연 분야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공연 분야가 아닌 문화 예술 영역에도 정책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가령 '부산문화관' 건립 계획은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완전히 실종됐다. 또 부산시 북구에 세워질 예정이던 '꿈꾸는 예술터'는 끝내 무산됐다.

코로나 사태가 문화예술 홀대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이슈페이퍼가 그야말로 날카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대안'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슈페이퍼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어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와 정책위원회가 정책을 구성해낸다면, 그야말로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량의 잡지에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슈페이퍼가 단지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다면,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의 말처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끊어 넘치는 작은 용광로"가 될 수 있다면, 부산문화 생태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슈페이퍼의 첫돌을 축하하며, 건승을 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 삶과 사회의 밑그림 - 문화비전

창간에 붙여 부산문화의 건강한 담론을 담은 그릇이 되겠습니다

칼럼 정책연구센터에 바란다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집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소개

문화정책이슈 1 문화비전이 그리는 10년 후 우리의 미래

문화정책이슈 2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정책보고서 갈무리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현황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2020 부산문화재단 공모사업 일정 안내

부산문화의 건강한 담론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이 내부 기구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 지 이제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0여 년 전 잇따라 문화재단을 설치한 이후 각종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이 이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창립 이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문화 지형도의 변화에도 나름의 역할을 해낸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광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화두로 남아 있고, 지역 재단이 만들고 시행해온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민과 문화예술인에 충분히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인 문화정책의 개발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때로는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성을 갖춘 지원 프로그램, 때로는 꼭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당대의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창의력과 도전정신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통찰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올바르게 설정된 문화정책이 이런 여러 능력들을 끌어내는 기관차 노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문화재단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문화정책 연구와 개발 역량의 강화라고 믿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런 깨우침 때문입니다. 부산의 이런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미 벤치마킹을 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가 중심이 돼 지난 9월 발표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역시 전국의 여러 문화관련 기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책연구센터의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펼쳐온 사업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를 토대로 한 새로운 프

로그래밍의 모델링, 지역 문화 현장과 재단과의 가교 역할, 국가-자치단체와의 새로운 협업 모델 구축 등등. 나아가 부산문화 전반을 관찰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의 개발, 국내외 우수사례의 소개, 각종 문화 정보의 제공과 데이터베이스화도 정책연구센터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야 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지금 이를 위한 토대 다지기에 한창 분주합니다. 자체 조직 정비, 연구과제의 선정과 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 도출 등등이 그것입니다.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출범한,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받아야 할 터입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정기간행물 형식의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를 선보입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부산문화재단의 각종 시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물론,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 문화 관련 각종 데이터를 담아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노릇도 하겠습니다.

'이슈페이퍼'란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두꺼운 책자는 아니지만 그 체제와 내용은 알차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화두를 압축해 고갱이를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의 문화담론을 차곡차곡 묶어내겠습니다. 시민, 문화예술가들의 요구도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산문화예술의 미래를 그려 보이는 청사진이자 부산문화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부산문화에 대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끊어 넘치는 작은 용광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대한 시민,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정,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간곡히 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에 바란다

이지훈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래도 '전문성'과 '맞춤형'이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알다시피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 출연기관이다. 예산도, 정책도 부산시가 마련한 틀에 맞게 운영된다는 뜻인데,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 문화계가 모범으로 여기는 영국 예술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구현한다. 정부는 어느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가에 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그것은 위원회와 체결하는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로 실현된다.

그 유명한 '팔 길이 원칙', '불간섭주의'도 위원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이 아니다. 위원회가 정부와 정책적 협의를 거친 뒤,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금 분배에 있어 독자성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것이 팔 길이 원칙의 현실이다.

이 관점에서 부산시와 문화재단을 생각하면, 시가 재단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고, 재단이 자율적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은 팔 길이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전문가가 문화재단의 시급한 과제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을 꼽는 이유는 뭘까.

문화재단의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이 한 가지 이유일 듯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아직도 문화예술진흥이 창작자 지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 창작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창작 지원이 문예진흥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문학이라면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문학 작품이 유통, 소통되는 방식을 파악, 개선하고 생활문화동아리 실태, 국내외 문학행사-축제를 연구해야 한다. 또 문학이 부산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처럼 문예진흥에서 창작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창작 외적인' 활동 지원이다. 예술매개(홍보, 교육·컨설팅, 정보·교류, 공간), 생활문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각 분야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산시도, 문화재단도 '충분히' 잘하진 못한 것 같다. 부산시는 비록 큰 그림은 그려도, 전문-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맡을 담당자의 연속성과 현장 밀착이 부족했고, 문화재단은 '그날그날'의 업무 수행에 급급한 나머지 큰 그림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이 일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현장'과 닿아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예술인들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정책연구센터는 큰 그림 속에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와 동시에 전문가와 시민들을 연결해야 한다.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동력은 여기서 나올 것이다. 또 그래야만 예술가와 시민들에 도움을 주는 '선진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동안 문화재단이 한 일이 많다. 그럼에도,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을 것 같다. '커뮤니티 아트', '문화다양성' 분야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공허한 표어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사례-모델 발굴이 시급하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상응하는 문화콘텐츠와 '인문·기술 융합' 문화콘텐츠 개발은 얼마 안 가 현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시대의 변화는 문화재단이 단지 해마다 예술창작 지원금을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요청한다. 올해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한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다. 시대정신에 걸맞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연구센터 개소식 사진>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이슈페이퍼 첫 번째 주제는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 삶과 사회의 밑그림- 문화비전’입니다. 다양한 문화비전이 만들어낼 10년 후를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0년 후 문화예술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상상해 본 10년 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봅니다.

문화예술계에 복잡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을 계기로 문화예술계를 떠나 친구도, 오히려 굳세게 버티는 친구도 반반이 되어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버티는 것이 삶이 된 우리는 부산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버텼고, 싸웠고 그것은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조례는 개정될 것이고, 예술인 복지 계획은 예술인들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자리를 잃지 않을 예술인들은 버텼고, 앞으로 버텨가며 부산의 다른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현수정(영화를 공부하는 학생)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변두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조명하는 것이다.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중앙의 영토에 속하지 못하고 경계 바깥에서 머무르고 흐르면서 살아간다. 미래에도 여전히 예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철거당하는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예술과 미래의 예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의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언어와 리듬이 되어야 한다.

조은하(부산에서 퀴어인권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퀴어 성폭력 생존자)

문화비전이 1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개방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강조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참여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참여도 여유와 안정적인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비전을 통해 10년 후에는 저와 예술가들의 삶이 예술 활동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예술의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정책이슈페이퍼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정승민(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실현해 보여주는 20대의 공연, 축제기획자)

‘길이 만남이 있는 공간’이 되는 금정구가 되면 좋겠다. 퇴근 후에 장성시장 “나유타”에서 채식요리를 먹고 “복수가게”에서 빵을 산다. 꽃집 “위로”에서 꽃다발을 고른다. 거기에서 이웃 주민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문화/예술은 ‘타인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혹은 작품)과 만났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준다. 길 위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안아 줄 수 있다면, 더 살기 편한,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나까(싱어송라이터, 채식요리사, 무국적 비건 채식 식당 ‘나유타’ 운영자)

원고 요청이 왔다. 이런 분야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래도 적어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30 문화비전을 살펴봤다. 역시나 몇 번을 다시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 분야 정책이 섞여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왜 제외되었을까? 일상에 존재하지만 분야로 정의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것. 사실 나에게 문화란 그런 것 같다. 나는 문화가 공기 같았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개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모든 것들에 문화적 요소가 있고, 모든 사람 주변에 존재하는 것. 그렇기에 차별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엄창환(심오한연구소 공동대표)

독립예술축제 제로페스티벌이 20주년을 바라보게 된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시작된 축제지만 아시아 각국으로 널리 퍼져 개최되어도 좋을 것 같다. 저마다의 독립적인 예술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는 10년 후엔 마흔이다. 40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인데, 그때 나는 어디에서 어떤 책임을 지며 살고 있을까. 내가 지는 책임이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옳은 것이길 바란다.

이대한(현 부산독립예술축제 ZERO FESTIVAL 축제감독, 레게 밴드 해피피플에서 디제잉, 라이브믹싱을 담당하고 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걸어 동네에 있는 전시장에서 맘에 드는 한두 점의 작품을 오래 감상한 후, 인근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더니 이웃 분들이 친한 지인들이 참여한 공연이라며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공연이 끝나고 이웃들과 근처 맥주 가게에 들러 오늘 본 작품과 공연에 대한 소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꽃을 피운다.

김경화(설치미술작가, 협동조합 창 이사장)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마을에 도착한다. 꾸뻑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마을 입구 ‘가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글을 쓴다. 나의 건너편에는 자신의 흙 문은 장화를 뺀 위에 그리는 농부가 있고, 그 옆에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잔뜩 올려놓고 테이블 아래에서 턱을 괴고 엎드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다. 구석에 방음처리가 된 방에는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태블릿 속 디지털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고, 아침마다 ‘가게’ 앞에는 주민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주인은 말해준다. 오라고, 언제든 춤추러 오라고. 춤은 모든 감정의 언어이니 당신의 몸속이 흘러넘치면 언제든 오라고.

‘가게’의 뒤뜰 별채에는 마음껏 울 수 있는 좁고 기다란 방이 있다. 사람들은 방 밖에서 하루 종일 ‘울고 나온’ 그 사람을 축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그는 자신을 지배했던 슬픔을 색색깔의 종이로 접어 그들의 머리 위에 줄줄이 이어 엮는다. 주말에는 아무도 먹고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다 같이 모여 먹고, 한 데 모여 한꺼번에 처리한다. 다 같이 모인 그 자리가 공연 자리가 되고, 영화를 보는 자리가 되고, 같이 노래하는 자리가 된다.

바닥에 엎드려 턱을 괴고 책을 읽던 아이 하나가 다가와 “아줌마, 책 써요?” 나에게 묻고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 있는데...” 라고 말하며 두 엄마와 사는 일상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디지털 파일을 자랑스레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게.’ 그 가게의 이름은 ‘예술 먹는 가게.’ 마을마다 입구에 자리해 누구든 살피우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가게.

제일 먼저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썼던 우리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을까? 누구의 인생이든

생이 우리에게 원하는 몇 번의 왈츠를(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그런 세계가 되고, 그런 마을이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김비(소설가, <길을 잃어 여행 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 공저)

상상해본다. 10년 후의 지역문화를. 작가는 저작권을 누구와 나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해주겠다, 멘토링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공동 저작권이란 단어가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된 지역문화를. 소설을 연재 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마다 다이렉트 투고 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연재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기획사와 에이전시가 없는 지역 문화를. 그건 다 작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임을 누구나 아는 지역문화를. 원작에 대한 저작권은 다 주는 대신 2차 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이 인쇄된 계약서를 슬쩍 내밀고 수익 분배를 하자는 걸 코웃음 치며 ‘차든 2차든 저작권은 다 작가 거예요’라며 거부할 수 있는 창작자가 많아지는 미래의 지역 문화를.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되어야 한다.

김유리(작가 출판사 키스더북스 대표·기획사 아주작은코끼리 대표)

10년 뒤엔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법이 개선되길 바란다. 특히 대학가 앞에서 힘겹게 청년문화를 지키고 있는 라이브클럽, 라이브 펍들이 음향장비를 갖추고 춤과 노래를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허다하게 단속대상이 되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지역 뮤지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법보다 먼저 생겨난 춤과 노래를 규제하는 법은 당장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방호정(부산힙스터연맹 총재)

“내 삶과 함께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소개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2018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에서 한 시민이 이런 요청을 했다. “예술을 통해 사회의 포용성이 촉진되고, 시민 누구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 활동이 많아져서 시민의 삶을 변하게 하는 재단이 되어주세요”라고.

부산은 점점 외로운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노인인구와 자살률은 특·광역시 비교 1위이며, 빈집은 1만 4천여 호에 달한다. 1인 가구 수도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빈곤율도 높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경제적 또는 도시재생의 가치에 주목했던 점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은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치러진 지난 9월 25일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으로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5가지 전략과제 20개 추진과제 65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총 3,687명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고,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실천과제와 57% 가량을 연계해 구성했다. 특히 외부 연구기관에 수탁하지 않고 시민·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해 재단의 내부 구성원이 집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공동체 결속과 시민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는 많다. 미국 예술문화부에서는 예술이 건강 문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가이드북 「ART&WELL-BEING TOWARD A CULTURE OF HEALTH」를 제작했고, 영국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지역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에서도 2010년 대비 2015년 문화 분야가 가장 높은 유인 요인¹⁾이 되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에서도

비용편의 비율이 107%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²⁾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자료에서 예술이 삶과 사회 변화의 힘이 되어 왔다는 증거는 많다. 다만 그동안 문화 정책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인 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 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이 지닌 사회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겠다는 과제를 향후 10년의 주요 미션으로 내걸었다. 특히 UN에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문화적 실천을 제일 첫 번째 추진과제로 삼았다.

더불어 그동안 공급자형 예술 지원 체계에서 매개하는 플랫폼형 지원체계의 전환과, 향유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과제에 눈에 띄는 변화이다. 부산의 해양성이라는 지역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 연대 구축, 신조선통신사 다각화, 자매우호도시 해양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과제를 담아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산정했다. 초기 단계(2020-2022)에는 체계 개선 연구와 기존 사업 재구조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중기(2023-2025)에는 우수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네트워크를 내실화하며 장기적(2026-2030)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선도 기관이자 해양문화도시 허브로서 부산의 위상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예술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재단의 다짐에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1) 부산지역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복동 연계 방안 (부산복지개발원, 2017)
2) 2018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보고서(지역문화진흥원, 2018)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체계도>



출처: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문화비전이 그리는 10년 후 우리의 미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토크아보기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9년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10년의 전망을 세우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문화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등 많은 기관들이 2030 문화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긴 호흡으로 문화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 이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의 문화비전을 소개합니다. 많은 문화비전이 수립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 수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고,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앞날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10년 동안 달라질 우리 삶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문화비전에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방향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의제 및 대표과제	1.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 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지역문화분권 실현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청책(聽策)포럼 #온라인 국민제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 문화비전은 참여정부의 문화비전<창의한국>처럼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수립되었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새문화정책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1년여 기간 동안 비전 수립 작업을 주도하였다. 새문화정책 준비단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분과로 구성되었고, 23차례의 정례회의와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13차례의 문화청책(聽策) 포럼, 6회의 분과별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이슈와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제안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미투 사태 이후 성평등 관련 이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신속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문화권 보장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기초단위 #지역혁신 문화플랫폼 #참여와 협치의 행정구조

참여정부 문화비전 <창의한국>이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역할을 조명했다면, 이번 문화비전에서는 문화의 주체로서 '사람'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 내재한 문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것에 집중했다.

비전의 주요 가치를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전략 목표로 잡았다.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를 통해 사회의 창의성이 확산되어 사회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9개 의제 및 47개 대표과제를 도출하였다. 눈여겨볼 지점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 부분에서 사회문제 해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생활권과 밀접히 관련된 기초 단위에서 문화적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고, 공론·학습·해결의 지역 혁신형 문화플랫폼 모델을 구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대표과제 중 '문화적 전환도시' 제안 등은 문화와 환경의 결합이라는 문화의 사회적 확장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화비전의 실행전략으로 '참여'와 '협치' 원칙을 강조하였고, 인간생활의 핵심 권리인 문화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최소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운영	
전략과제	예술의 지평 확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기관운영체계 혁신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아르코혁신TF #현장예술인 간담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2018년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가 포함된 '아르코혁신TF'를 발족하여 조직혁신과 사업혁신 분야에서 23개의 혁신 의제를 도출하였고, 후속조치로 '소통혁신팀'을 구성하여 혁신 의제 추진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아르코 비전 2030TF'에서 비전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간담회, 비전 수립 워크숍 등을 통해 예술가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까지도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관련 예술가 레지던시 문제' 등 예술 현장에서 제안되는 문화 관련 의제들에 대해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예술창작 #예술가의 활동환경 조성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아카이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이다. 예술창작에 방점을 두고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면서 예술가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듯하다. 이를 기반으로 '예술가가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누구나 가까이에서 창조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을 비전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작품의 유통과 확산 과정에 대한 집중이 눈에 띈다. 비평 확대, 유통망 마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창작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일 것이다. 또한 현행의 보조금 지급 외에 변화하는 예술창작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형태를 모색하고,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여건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언급하면서, 예술의 사회기여도를 표현하는 예술지수 발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참여활동 확대를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문화예술을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예술기록유산 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부산광역시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비전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4대가치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
4대목표	해양문화도시	포용문화도시	융합창조도시	문화협치도시
10대 전략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위한 문화자유구역 조성 •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립 위한 해양문화 도시 브랜드 구축 • 시민 평화문화 공감 위한 남북문화 교류 추진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 다양성 확산 위한 경계예술문화활동 육성 • 시민 문화권리 보장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 강화 • 시민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생애주기별 문화기획 확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 4차산업혁명 대비 위한 기술융합형 예술시장 창출 • 기술기반시대 대응 위한 창의적 공간 조성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 문화행정 혁신 위한 시민문화권리선언 • 문화생태계 조성 위한 문화재정확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 정체성 확립 위한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 전통성 강화 위한 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 지역성 확산 위한 권역별 해양문화지역 조성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 사회적 치유와 회복 위한 문화가치 확산 • 지역 공동체 복원 위한 맞춤형 문화재생 • 공동체문화 확산 위한 마을문화 환경조성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 •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 위한 지원체계강화 • 지역문화 역량강화 위한 문화인력 양성 • 문화예술인 생활보장 위한 복지체계 구축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 문화분권 실천 위한 문화자치기반조성 • 부산형 문화협치 실현 위한 시민참여기반조성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 지역격차 해소 위한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 • 지역문화특화 발전 위한 문화특구지정 추진 •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위한 E-문화파크	시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 시민 문화학습 기회 확대 위한 문화예술교육체계 개선 • 시민 문화학습 강화 위한 문화예술교육플랫폼 구축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아젠다 도출 #타운홀 미팅 #구군별 공청회

부산광역시도 2007년 <부산문화비전 2020> 선포 이후 2017년부터 문화비전 2030 계획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 차에 정책 아젠다 도출과정을, 2년 차에 비전 수립을 진행하였다. 준비기간 동안 10차례의 타운홀 미팅, 18차례의 라운드테

이블을 비롯한 총 4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구, 군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이슈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행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해양문화도시 #사회적 치유와 회복 #남북문화교류
#소셜아티스트 #문화다양성 #E-문화파크

부산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은 시민을 문화정책의 주제로 전면에 내세우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이다. 시민의 주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해양도시로서의 부산의 정체성을 함께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역 차원에서 남북문화교류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특징적이다. 해양도시라는 특징과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영화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남북한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산문화비전에서도 예술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소셜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공동체 내 관계 회복을 위한 '정담정(情談井)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술가들이 교육 및 복지 영역에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기존 사례를 넘어 주도적으로 예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비전을 통해 상상 가능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과거의 문화계획이 일부 행정이 및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30 비전들은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표방한다. 다만 비전 내용에서 현장 의견 반영의 상세한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앞서 살펴본 계획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다. 참여정부 문화비전인 <창의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도시 재생, 복지 등의 영역에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났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전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도구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이 된 지금, 예술과 지역사회 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비전은 말 그대로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실행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비전 실현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수립이다.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변화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틀 거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제도는 구축 이후에도 여러 의견 등을 반영하며 진화해나가야

한다. 문화비전 또한 설계안으로서 구체적 결말에 대한 기대와 예상만 존재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긴 호흡을 염두에 둔 문화비전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현장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과정은 투명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소통 과정 또한 지켜져야 한다. 비전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무리 높고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전은 영원히 우리 일상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비전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개선 과정 속에 담아낼 것인가일 것이다.

* 지면 관계상 비전의 세부과제를 다 실지 못했습니다. 문화비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2030'
https://www.mcst.go.kr/kor/s_policy/culturevision2030/culturevision2030.js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index>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조정윤 부산광역시 문화정책협력관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지적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함의로 이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³⁾

한편, 2015년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한 명이라도 소외 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으로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 전체의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분야는 SDGs의 17개 목표에는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UN 산하 UNESCO를 중심으로 문화 분야도 '문화의 사회적 영향' 강화를 위해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는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⁴⁾이 발표되었으나, 후속 연구와 문화예술기관의 실천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제시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네스코를 비롯한 해외 문화예술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PEOPLE), 세상(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5가지 분야(5Ps)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설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최근 'Reshaping Cultural Policies (global report 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재구성의 목표 추구를 SDGs에 연계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해외 동향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교육 분야가 SDGs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와 예술이 기본이 되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 교육가들은 SDGs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⁵⁾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이라는 사회적 사명(MISSION)을 선포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과제로 UN의 SDGs를 문화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재단의 사업 목적은 대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확립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왜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했다.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은 SDGs의 17개 과제를 통해 재단 사업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체계로 재구조화'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사명과 목표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SDGs 목표 코드제를 수단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만창의문화촌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0)'라는 SDGs 실현을 위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UN SDGs의 이행당사국으로 목표의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이다. 향후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약을 근거로 가시적인 계획 수립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30은 선언적 의미의 SDGs 실행 약속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SDGs 실천계획을 선도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 추진과정, 성과와 한계에 관한 결과, 환류 체계를 국내 문화예술기관에 공유해야 할 것이다.

3) 영국 문화부(DCMS)는 2015년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캐나다는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2017)', 호주는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WA(2019)'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17개 최대 공동 목표



17가지 목표 중 문화 해당 코드(번호)

빈곤퇴치(1), 건강과 웰빙(3), 양질의 교육(4), 성평등(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9), 불평등 완화(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 지속가능한 소비(12), 기후변화대응(13),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

4) 본 연구는 SDGs의 주요 실천과제들과 '문화' 간의 관계, SDGs의 실행에 기여하는 국내 문화정책의 가치, 목표, 정책지표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다양성(Diversity)'이라는 근본적인 지향가치를 모토로 '포용(Inclusion)', '혁신(Innovation)', '회복(Resilience)', '참여(Participation)'를 제안하며, 25대 선도지표를 제시하였다.

5) 캐나다 예술교육가인 마크 레이드(Mark Reid)는 Arts Education and the SDGs라는 기고문(2017)에서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SDGs 17개 각 과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질의 교육(4)에서는 종합교육에 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현황

송교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2017년 말 문학, 미술, 사진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가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협력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공연예술계(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와 대중문화예술계(만화, 방송, 음악, 패션)의 성폭력 실태조사도 추진되었다.

이처럼 분야별 조사는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역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은 부산문화재단이 2018년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조사> 과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피해 사례 조사(조사명 :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들이 만연함에도, 묵인되어 왔던 것에 비해서는 뒤늦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2018년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면조사가 아닌 온라인 조사로 추진되었으며, 예술인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2,000명을 조사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취약한 예비 예술인(청년, 대학생 등)을 조사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10~20대 연령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28.5%)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36.4%, 여자 62.3%,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음악, 문학, 국악, 연극, 무용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선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33.3%가 심각하다고 응답,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상의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술과 연극, 영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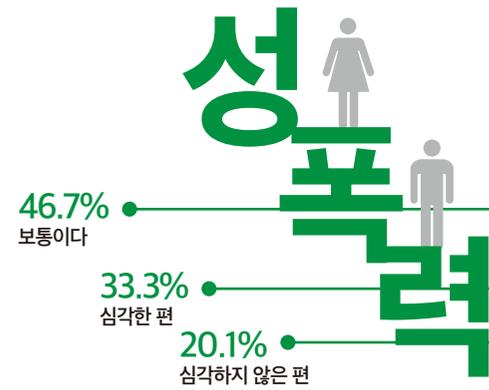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하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예술계 내의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특유의 분위기도 큰 비중(31.4%)을 차지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성폭력의 주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30대 이하 예술인은 권력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로 인식하는 등 세대별로 원

인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하였다.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음악과 무용, 국악 분야는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문학과 연예 분야는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문화예술계 활동 중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직접 경험한 경우와 피해를 목격한 경우 모두 성폭력의 유형과 가해자 직위를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유형은 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위는 주로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대면 가능성이 높은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 예술가의 비율이 높다고 응답되었다.

직접 경험한 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방법, 목격된 피해의 해결 결과에서도 대체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거나, 작품 활동에서 불이익 등 가해자의 보복과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끝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식 변화 캠페인 및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한 번의 실태조사로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나 구조적 한계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방향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이정표라는 점에서 2018년 조사는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깊이 있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간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 부산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시나요?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1+2순위 응답기준)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4.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5.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2019년 부산 문화예술계의 주요한 이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비전 수립, 예술계의 성폭력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문화예술로 지역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마을을 품어 안은 작은 문화공간의 등장, 문화예산을 둘러싼 갈등 등 돌아보면 명과 암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호에서는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에 대한 편집위원 대담을 준비하였습니다. 갈등이 모여 공론의 시작점을 만들듯 2019년의 이슈들이 2020년의 도약의 계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0. 2. 3.(월)
장소	스페이스 옴(부산 동래구) 송교성(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송진희(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참석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안재홍(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원항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윤상열(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인턴)
기록	

원항미 · 이번 대담의 주제는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이다. 2019년 부산문화예술계 내 긍정적, 부정적 사건들을 돌아보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의미 있는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미리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비전 2030 수립이 줄을 이었다. 연말에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인정하는 시작점이라 생각된다. 또따또가 예산 삭감,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등과 같은 진통도 있었다. 영역이나 장르를 넘나들고 융합하는 소위 '크리에이터',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2019년 만의 이슈라기보다 근래 몇 년간 발생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 지역 곳곳에 생겨나고, 아트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2019년 부산 문화예술계의 이슈들을 말씀해 달라.

송진희 ·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공존하는 이슈로 성폭력예방센터가 있다. 2018년 미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은 대응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모든 체계나 제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부산은 지역 최초로 자체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를 설립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예산부족으로 임시 운영되는 등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정식 운영되었다. 이는 지자체와 민간, 예술인들이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결실이자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예방센터가 만들어진 후 재단도 빠르게 변했다.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할 때 성폭력 책임 서약서 작성제도를 만든 것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노력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재단에서 예방센터를 지원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예산이 반액 삭감되었는데 예방센터를 만들기 위해 투여했던 노력에 비해 예산삭감과정에 서 소통이 부족했던 현실이 답답하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또 다른 쟁점은 예방센터가 문화예술계가 아니라 여성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개인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80%가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예술인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 성폭력 발생 시에 법적보호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이 되어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활동을 제한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특수성과 법적 빈틈을 예술계에서 정책과 제도로 보완해 나가야지, 부서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이지훈 · 그것과 연결해서, 미투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엔 이런 문제도 문화가 해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문제도 과거에는 복지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화의 문제고, 해결 역시 문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비전 2030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에는 전문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큰 그림에 걸맞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배정 등의 구체적 결정과정에서는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송교성 · 2019년에 비전이 수립되고, 성평등, 문화다양성 문제에 대해 문화적인 대응이 나왔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흐름이 문화라는 개념을 확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재단에 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2019년도에는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 같다. 2020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차재근 · 사회 현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기점이 필요한데, 작년엔 미투, 또따또가, 성폭력 예방센터 예산 삭감 등 다양한 계기점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태가 새로운 형식으로 예술가들이 자신을 표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이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던 총돌도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의 계기점이 사회의 판을 좋은 방향으로 뒤엎은 것처럼 예술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좋은 방향으로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구체적 플랜 필요

이지훈 ·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것은 시민, 예술가, 시에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지금 시정 전반에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술 영역 예산 삭감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창작지원 정책은 예술가 지원 중심이었고 예술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은 이에 비해 경비가 더 든다.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은 아까 언급한 낙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과 예술가들의 콜라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을 진흥시켜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 자칫하면 '시민들을 위한 예술 축제 한마당' 같은 축제를 한 번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 해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공공 인프라와의 연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고, 이런 시각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과 예술가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송진희 · 부산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평등은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부산에서도 다방면으로 성평등 정책과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내 성평등위원회의가 꾸려진 것도 향후 성평등 과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정책과 사업에 필수적으로 성평등 전략과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발생하는 유리천장, 예술인들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세밀한 상황까지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성평등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 연구와 포럼들을 통해서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송교성(플랜비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이지훈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성은 부족한 것 같다. 시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해도 시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안재홍 ·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지역 소극장 폐관문제와 같이 기초 문화 생태계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지훈 · 시민 중심으로 가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공공인프라다. 공공인프라 속에 민간 소극장도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소극장을 지원해주고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짜야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 생소하지만,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이 기존의 창작지원 정책보다 예산이 더 든다고 했는데, 시민의 예술 활동을 공공 차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그래서 자발적 예술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하면서 공고한 민·관 협치의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교성 · 또따또가 예산삭감문제는 또따또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계획 부재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또따또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부재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 또따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창작공간 중심으로만 한정되어 바라보는 것을 지역적 차원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예방센터 예산삭감 등의 부분들도 소통과 거버넌스 과정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거버넌스 신뢰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지훈 · 부정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성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부정적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건설적인 에너지로 나타난 것은 미투 운동 밖에 없다.

송진희 ·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거버넌스 구조에 소통이 안됐을 때에 대한 이후 대응이 부족하다.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거버넌스에 있어 참여보단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원회 결성, 권한 등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

차재근 · 사실 예전부터 시와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은 쉽지 않았다. 집행행는 입장과 의사소통하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거버넌스 구조가 요원했지만 의견 교환 정도의 의미 있는 시도들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도들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집행 단위에서 시민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최고 결정자는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해버리고 접근하는 것 같다. 거버넌스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서로 뭘 원하는지 대화조차 안하고 있다. SNS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는 공간으로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원항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장소통 회의록이 바로바로 공개되는 것처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문화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다. 현재 자신의 활동이나 사회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흐름이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소통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금정구 문화공간네트워크 아트페스타 스폰 ©금정문화재단

지역과 시민의 틈을 파고드는 문화예술의 의미있는 시도들

안재홍 · 마무리를 하면서, 2019년 부산 문화계에서 작지만 의미 있었던 시도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여, 신 크리에이터의 등장이나 골목 예술가들이 보여주었던 새로운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송교성 · 작지만 의미 있었던 시도로 소규모 문화 공간들의 활동이 있었다. 모퉁이 극장의 중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한성1918, 부산문화재단의 부산을 변화시키는 예술, 망미단길 형성 등이 의미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한다.

원항미 · 금정구에서도 갤러리, 서점 등 소규모 문화 공간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아트마켓을 여는 등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작은 곳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간이 점점 형성되고 있고 그들 간의 연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지훈 · 망미동에서 서점 중심으로 좋은 문화공간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F1963이 만들어진 것과 같

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F1963이 공공인프라로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공적 차원에서는 씨앗을 제공해 주었고, 그 씨앗과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이 결합된,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안재홍 ·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분권이다. 문화예산이 시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인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재단 차원에서는 예술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송진희 ·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리터러시(literacy)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작년 문화다양성사업에서도 지역 언론에서 장애, 이주민, 젠더 문제를 기사화할 때 드러나는 성별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등을 분석한 리터러시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리터러시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항미 · 문화예술 생태계의 단위가 자치구 단위까지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기능할 수 있는 전환점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차재근 · 부산 예술가들과 함께 어우러져 부산에 와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 예술인들에게는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즐기기에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예진흥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정보를 잘 알려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

1)사전적 의미는 읽고 쓰는 능력.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함.

부산 복합문화공간 소개 - 스페이스 음



스페이스음은 2011년 개관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만나고, 시민들이 문화애호가와 예술 소비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공간은 카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주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 교감할 수 있도록 작은 음악회를 370여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진 작가전 및 설치전시 등 120여회의 전시와 20여회의 크고 작은 국제교류 음악회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06 / 051-557-3369 / www.spaceum.kr

또따또가 10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작공간의 미래



또따또가 아데코 포럼행사 HAMONIM
©또따또가 지원센터

지난해 말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문화 예술계에 논란이 불거졌다. 또따또가 운영에 대한 시의회 감사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 나오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걷어내면 결국 이 문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정당성, 창작공간의 가치와 의미, 또따또가의 향후 발전방향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 혹은 실비로 거주할 수 있는 작업실을 제공하여 개인 혹은 공동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작공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한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논산 창작스튜디오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창작공간뿐만 아니라 씬스튜디오와 경안창작스튜디오 등 기업이 후원하는 창작공간, 대안공간 풀, 구산동 오픈스튜디오와 같이 대안공간이 주도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시도됐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에 걸쳐 다양한 창작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확산됐는데 초기에는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공간이 주류를 이뤘지만 서울시의 흥은창작센터와 연희문화창작촌 등과 같이 공연예술과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고 있다.

창작공간의 정책적 취지와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예술가들의 창작 및 교류 촉진'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향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다수의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예술가들이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자신의 작업과정이나 새로운 작업의 성과를 오픈스튜디오나 다양한 리뷰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예술적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계기를 가지게 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창작공간의 활동은 공연이나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결과물만 보여주는 기존 문화공간, 공연장이나 미술관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어 안정적인 창작환경의 제공, 예술가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의 촉진, 예술가와 시민들의 교감을 통해 '과정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의 형성을 지향한다.

또따또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 쇠퇴하는 부산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 내 유희상가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초기 18개소 35개 작업실로 시작한 또따또가는 현재 26개소 80실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해서 현재 200여명 넘는 작가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3년 주기로 새로 입주작가를 모집하는데 입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비로 작업실을 마련하여 이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9년부터 또따또가 출신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에서 직접 또따또가의 운영을 맡고 있다. 정주 예술가들의 증가와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입주기간 이후에는 흩어져 그 성과가 단절되는 다른 창작공간과 달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또따또가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따또가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소통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다른 창작공간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지역문화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멕시코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또따또가에 입주한 많은 작가들도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예술가들과 폭넓은 교류와 협업, 원도심의 독특한 정체성과 아우라가 자신들의 작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 창작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제도화되면서 초기의 활력을 잃고 주기적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형식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예술 실천에서 창작공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예술가가 소외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시작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인터뷰어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차재근 · 대표님, 반갑습니다. 2018년 2월 이후에 취임 2년차를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하셨던 사업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섭 · 2018년도 2월 23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성과라하면 재단 사업이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8년 재단 예산이 300억 정도였고 2019년도 400억, 올해는 700억 정도가 되어 예산으로만 봐도 굉장히 늘어났지요.

그리고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던 용자사업인 예술인복지금고가 있는데, 기재부 예산 배분과정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2019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주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원래 용자 사업과 더불어 예술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취지의 사업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차재근 · 예술인복지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복지와의 차별성 논란도 많았는데 8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 예술 활동을 하

는 사람으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문체부와 국토부 등이 협력해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도 지원하는 등 예술지원방식이 다각화되고,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주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의 지원이 있습니까?

정희섭 · 현재도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중에 전세 보증금 상품도 포함되어 있고, 보증금의 한도도 올해는 1억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문제는 기존의 공공사업에 예술인들이 입주 자격을 갖게 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차재근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오랜 기간 하셨는데 예술인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과 선결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정희섭 ·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발한 계기도 그렇고, 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언론에 비춰지면서 일반 사회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고, 자연스럽게 창작품의 수준도 떨어질 수 있겠지요. 예술의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서 예술분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섭 · 이 문제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 급여의 원래적인 뜻은 실업 기간 동안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예술인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든 뭐든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잡혀 있는데 이를 왜 실업으로 보아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신의 수익만큼 불입을 하고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식인데 과연 현재 예술인들이 얼마나 납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공적인 보조가 일부 들어가겠지만 급여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급여의 50%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180만원 받는다면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받으려면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차재근 · 요즘은 생활 임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활 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급여가 적더라도 생활임금제도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은 어떻습니까?

정희섭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노동환경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기에 도입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재근 · 현재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프로젝트들은 있습니까?

정희섭 · 지금 준비 중인데 각 지역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 개념으로 일종의 전달 체계를 정비한다 할까요? 작년엔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 신청하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공간이나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의 사업을 설계, 추진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올해부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의 일정 부분을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사업처럼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비취지는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사업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예술이라는 직업은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측면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을 옹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재근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술 활동이나 예술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원 받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한데,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복지재단이라는 명칭도 예술인권리재단 등과 같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섭 · 적극 동의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재단의 명칭도 예술인권익지원재단 등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단의 정체성이 더 명확히 드러나겠지요.

차재근 · 예술가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계약이 있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으면 생활여건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예술가들은 투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되어 요즘은 연극의 경우 배우들 연습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연습이 어려워지

차재근 · 복지재단 사업 설명회를 열어 예술인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희섭 · 좋은 제안인 것 같네요. 예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에서는 작년에 예술 현장과의 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몇 분야의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소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논의나 예술 현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아이디어 제안들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예술인들의 참여 통로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노동 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위원회나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계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예술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술계가 참여하는 장이 더 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근 · 예술가들이 법무부 위원회 같은 곳에 참여하면 교도소환경을 바꾸거나 제조사들을 위해 예술가들이 제안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창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부 부처 위원회 등에 들어가서서 예술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저는 복지 재단이 하나의 창구가 돼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예술로(路) 사업>도 직장인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프로그램이든 제도든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희섭 · 예술인 고용보험도 국회 입법 후 시행령 준비 등의 과정이 차질 없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취임 전부터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수도권 집중성에 관한 지역 예술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 설명회도 추진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창작준비지원금에 농어촌 거주 예술인들에게 가점을 주는 체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개념으로 접근했었지

만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역차별 문제도 있고 해서 농어촌 지원법에 근거해서 제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을 중심으로 저작권이나 예술인의 권익 교육활동, 세무 교육 등을 했었는데, 예술인들이 수입이 적어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무 교육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노동법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해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재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금융 교육이나 전세자금 용자에 따른 부동산 정보들처럼 생활 관련 교육들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보험 관련 교육 등을 고민 중입니다.

차재근 · 연세가 있으신 원로예술가들에게 저작권 같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교육이나 계약 대행 등을 지원하면 예술가들에게 학습도 되고,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희섭 · 좋은 제안입니다. 예술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직업적 권리 부분은 확대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티스트피(artist fee)처럼 예술가의 노동과 작업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많은 케이스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술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재단이 이해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서 매니지먼트 권리 옹호도 하고, 개별 예술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기관과의 접촉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면서 공공 기관이 가지는 행정적 제약을 넘어서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향후 잘 발전해서 예술가들이 자기 권리를 확보하고 매니지먼트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재근 ·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희섭 · 예술인 복지가 새로운 정책 이슈로 많이 떠오르는데 각 지역마다 정책적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권리, 권익 지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가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강조하다보면 예술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자꾸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출발은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늦게 끝나거나 주말에 열리니까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오픈시간을 예술가들의 활동에 맞추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학로와 마포 두 군데에 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다른 곳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라도 공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예술인들의 생활 리듬에 맞는 어린이집 사업을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 모델이 전부 맞벌이 부부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 시간도 잘 안 맞고, 또한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은 재직을 증명받기 힘든 구조이기에 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갈음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다행히 올 3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문제도 예술인을 위한 산재 시스템을 별도 운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 산재 시스템에 예술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급한 대로 산재전문병원인 녹색병원과 직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맺어서 예술가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인만의 별도 복지 사업이 아니라 기존 복지정책에 예술가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행정적인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재근 · 예술이 직업으로堂堂하게 인정받고 일반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예술가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예술인복지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들이堂堂하게 자기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지속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재단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섭 ·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개요	공고일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 창작준비금 지원 1인당 연 300만원	(1차)2월 중 (2차)7월 중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리더예술인] · 예술로 사업 총 910만원(6.5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420~840만원(3~6개월) [참여예술인] · 예술로 사업 총 720만원(6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360~720만원(3~6개월)	2월 중
예술인 신문고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불공정행위	상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지원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프로그램] 심리검사, 상담(12회 한도)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비용	3월 중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	[피해신고상담 접수] [피해 지원 연계] ·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상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40~50% 지원 (보수 179만원 한도)	3월 중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보험료 50~90% 환급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 최대 500만원)	상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 예술인전세자금대출(최대 8,000만원) ※ 대출한도 변동 가능	상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예술에는 성별이 없다.

여성들에게 참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 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술교육은 물론이고 예술가 조합이나 아카데미, 아틀리에에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 시대를 다룬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술아카데미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해야만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우리가 배워온 서양미술사 작품에서 여성을 누드상태의 수동적인 포즈로 그린 이유도 다수의 남성 화가들 시선에서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존재, 미적인 아름다움의 대상, 때로는 유혹하는 존재로서 대상화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부터 공적영역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운동의 물결이 불거지면서 버지니아 울프, 시몬 드 보부아르 등의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수동적인 여성성을 해체하고 차별과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수록 예술은 그 목소리를 알리는 매개가 되어주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에서 2018년 미투운동을 겪으면서 한국사회도 만연한 페미사이드¹⁾와 성폭력 문화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예술은 그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여성서사의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전쟁에 참전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남겨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존 남성중심의 전쟁서사가 지워왔던 장면을 살려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로 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을 재조명하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의 구술인터뷰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여

송진희 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 대표

성의 관점을 통해서 국가, 정치, 계급, 노동, 역사 등을 해석하며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자기역사쓰기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해내고 있다. 여성들의 자기역사쓰기는 생활예술, 지역커뮤니티의 영역에서 더욱 확장되어 대전지역 청년커뮤니티 <BOSHU>, 지리산 생활예술공동체 <문화기획 달>, 전주 여성생활문화공간협동조합 <비비> 등 지역, 청년, 비혼, 공동체를 주제로 여성들의 돌봄 노동, 터부시되었던 몸의 언어, 대안적 비혼 공동체 등 다양한 서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가부장제가 부여한 성별 역할 고정관념의 돌레를 뚫고 말하고, 쓰고,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서사는 탄생하고, 여성서사가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나약한 공주서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그려내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예술은 그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띄고 있다. 왜곡된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발굴하는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희망해본다.

더불어 예술을 통해서 성평등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면 예술정책과 예술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시대적 흐름에 비해 정책과 현장은 아직 과도기적 상태에 머물러있다. 2019년 한국성평등소위원회에서 추진한 '한국영화산업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개봉한 1,433편의 영화 스태프 성비 비율은 의상과 분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영역에서 남성성비가 월등히 높았다. 또한 2019년 아르코 예술지원사업의 성비통계결과 규모가 큰 사업과, 단체대표에 있어 여성예술가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성비격차는 통계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최종 후보자 전원이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최종후보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자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의 현실은 아직도 성별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17세기 예술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예술현장의 성평등 팩트 체크는 지속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체부가 성평등 정책을 중요한 비전으로 전면으로 부각시켰던 것에 반해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에서 성평등 정책이 소외되어 있는 지점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복지실태조사와 예술지원 사업에 따른 성비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연구가 선행될길 기대한다. 이제 문화예술계는 성 주류화²⁾가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예술계에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때, 예술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되며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도착할 것이다.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애·동거·혼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가리켜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여성대상범죄 국제재판에서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Diana E. H. Russell)은 페미사이드에 대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2)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에 성평등관점이 반영되는 것

시작하며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안 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특히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2018년 부산문화재단은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조사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조사대상은 14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부산 거주 및 부산지역 활동 장애 문화예술인 330명이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부산을 기반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 문화예술인으로, 연령과 경력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전업예술인 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비전업 예술활동인, 중고등 학령기에 있거나 예술분야를 전공하는 장애학생들까지 포함하였다.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악된 조사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문화예술 접근성 및 공간, 교류 및 협업영역, 교육영역, 창작여건 및 인식, 인구통계학적 문항,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등 7개 영역 총 47문항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

먼저, 응답자의 문화예술 활동 형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28.2%가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동아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발표나 전시를 수행한 경우'가 28%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스스로 자각하는 예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28.2%, '가족과 친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준' 25.4%로, 예술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 자각이 높은 편이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의 예술적 재능 발견 시기는 성인기 이후가 42.4%로 나타났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적 재능 발견의 기회가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목표는 '개인의 행복 추구(37.2%)'와, '사회 참여 및 교류(21.7%)'가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예술활동의 의미가 개인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 및 교류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기관은 60.6%가 '복지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원형태는 '공간지원(25.4%)', '공연비/전시지원비 지원(23.9%)', '강사 지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10-50만원 미만'이 38.2%, '10만원 미만'이 26.5%로 나타났다. 예술인패스와 부산문화재단의 인지여부 또한 '모른다'가 각각 86.1%, 60.4%로 나타나 예술지원 관련 정보 전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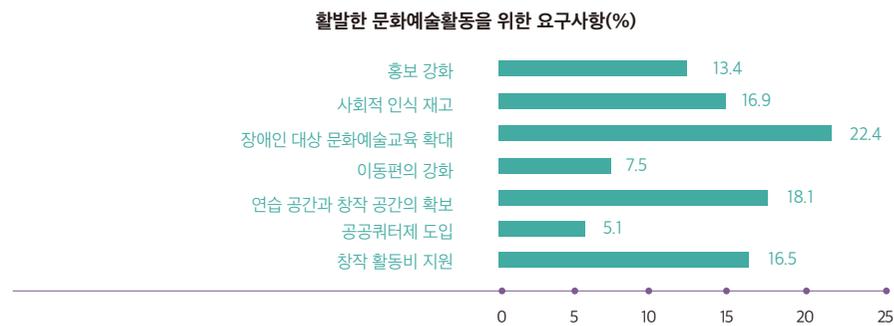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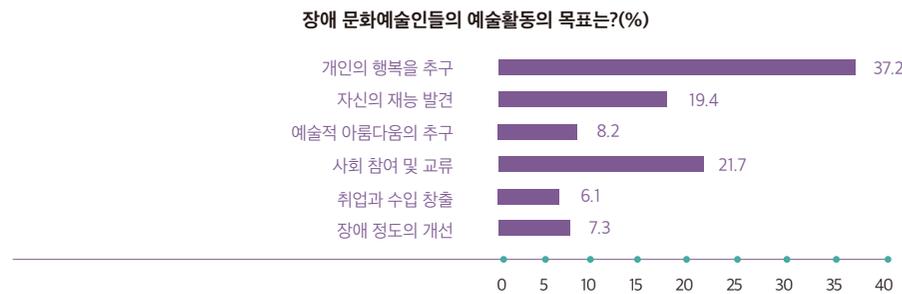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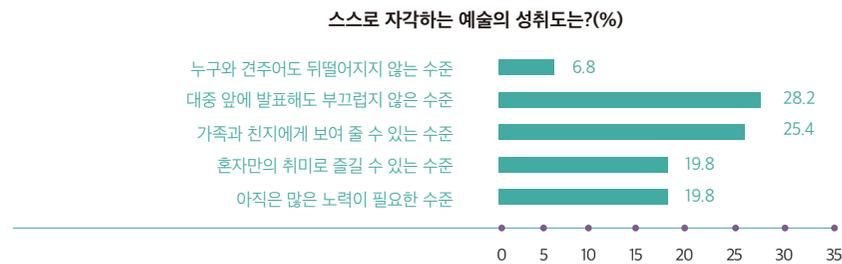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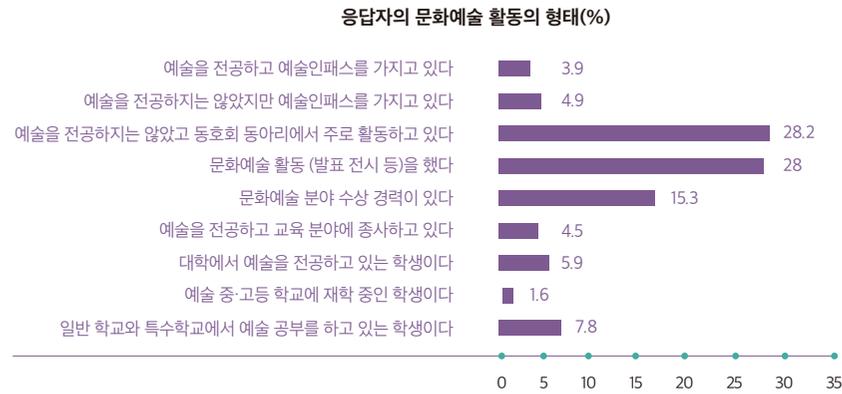
향후 장애 문화예술인이 활발히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응답자의 22.4%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꼽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확보(18.1%)'와 '사회적 인식제고(16.9%)'가 뒤를 이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첫걸음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국단위의 조사는 있어왔지만, 지역 단위에서의 조사는 드물었다. 특히 지역 차원의 장애 문화예술활동 정책에 대하여 정책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복지지역에서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이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로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한 것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부산 장애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시작

문화기본법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문화 향유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문화권)를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도 장애인들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2017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례의 목적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이다. 조례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추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정책 당사자의 실질적인 요구와 겹치는 것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 장애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이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3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

Editor's Letter

칼럼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예술 + ○○

정책보고서 갈무리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에, 봄은 왔다

포스트봉준호를 위한 부산문화정책의 변화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 먼구름 한형석 선생

사회복지사가 보는 문화예술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통한 실태조사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3호의 주제는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정책 트렌드를 살펴보는 「문화정책 이슈」에서는 사회적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상황과 사회적 대처방식에 대해 김건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가 예술활동가의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영화 '기생충'의 성공으로 회자되고 있는 '포스트-봉준호 법'이 지역 영화 환경의 다원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차민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의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시기 자유 아동극장과 색동 아학원을 만들어 전쟁으로 상처 받은 어린이들을 문화예술로 품어 안는 등 우리 사회의 아픔을 예술활동으로 치유하는데 한평생을 바친 먼구름 한형석 선생을 부산일보 이상현 기자가 재조명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예술+○○>의 이번 시선은 <예술+복지>입니다. 인간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바라보는 예술은 어떤 차이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문화예술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정책보고서 갈무리 코너에서는 지난 2018년 시행된 <부산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통한 실태 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산지역의 인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흔쾌히 원고를 적어주신 필진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가적 격리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각자의 집 발코니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던 이탈리아 한 도시의 광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이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 블루(corona blue)¹⁾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정서적 우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은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예술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술활동이 '잠시 멈춰야 할 존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서적 안전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함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전대미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아주 오랫동안 21세기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각인될 공간이 커졌다. 사실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꽤 튼튼해 보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전염속도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집단 감염은 패닉에 준하는 충격을 주었고 일상을 떠받치던 다양한 골조는 허물허물 녹아져 내렸다. 물질적인 육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의 유물론을 떠올리면 일상의 붕괴가 곧 생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하다. 특히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부분을 가장 아프게 하기에 차별적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예술, 예술인의 상황을 묻는 건 이제야 발견하게 된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고통스럽게 다시 직시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상성의 붕괴와 공공적인 것의 폐쇄

가장 일상적인 것의 풍경은 가장 관습적인 것에 가깝다. 약속을 하고 만나고 때가 되면 모이고 또 이동하는 것이 그렇다. 위기는 이런 것들을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간단하게 붕괴시켰다. 얼굴을 맞댄 일상이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일상의 붕괴와 더불어 견고하게 놓여 있던 공공적인 것이 폐쇄되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이 무기한 폐쇄되었다.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도 폐쇄되었다. 적어도 일상의 붕괴가 공공적인 것의 빠른 폐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것의 폐쇄가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원으로 몰려가고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동네 공원에 등장했으며 체육시설의 빈자리는 학교 운동장이 대신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공공적인 것의 후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어쩌면 공공적인 것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공공적인 것의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예정되어 있던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규모가 큰 것들은 상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예술인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공공적인 것의 폐쇄에 의한 것이다. 일단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2월 20일 자로 문화예술계의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내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용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예산에서 3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3월에 실시된 해당 대출은 신청액만 43억 원을 넘기고 종료되었으며, 여기에 추가로 4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다. 최초 안에는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당사자의 확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이 있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그와 같은 확인이 용이하겠는가 라는 점이었다.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가 민간 내의 민-민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관 관계에서의 피해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이런 에피소드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진단하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존중감 없는 대책들

안타까운 것은 다양한 문화기구들이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하나같이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를 테면 지역의 기초문화재단들은 예정되어 있던 예술지원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확대가 실효성 있게 느껴질리는 만무하다. 더구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별로 실효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티켓 1+1 지원 정책이 재탕되었다. 한쪽에서는 공연장 내에 관객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와중에 다른 한 쪽에서는 공연을 더 보라는 지원정책이 나오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온다. 급기야 티켓 1+1 정책을 포함한 공연 관람료 할인 정책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연기되는 촌극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 정책에 가장 가까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에는 1만 4,803명이 몰렸다. 작년에는 4,970명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사업규모가 커져서 상반기 6천 명, 하반기 6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지원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영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

서 예술인소셜유니온 등이 포함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라는 문화예술인 단체는 '창작준비금을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서 예술인들의 생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떠한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준다. 우선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급하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했던 공모지원사업비를 창작준비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재원은 하반기에라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밀어내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사업계획의 성격을 바꿔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를 버텨낼 수 있어야 하반기 사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급성을 고려해 가장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가장 간단하게는 공연이든 축제든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재원만큼은 당초 출연 당사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별다른 선별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공연 취소가 예술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약속되었던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예술인의 몫은 권리

최근 위기 상황을 맞아 국가마다, 도시마다 다양한 예술인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한 공연 등의 영상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공연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연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체와 예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스턴 시는 예술가 지원기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모든 공연, 낭독회 등의 행사 참가비와 취소된 회의나 레지던시, 작업과 연관된 여행비용까지 500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수업이나 강좌의 취소로 손해를 본 예술가와 부업을 잃은 예술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람 관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위기의 때이듯이, 예술인 정책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역시 위기 때다.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공공이 여전히 예술인의 문제에 대해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술인의 위기는 공공과 예술인이 공동으로 당사자임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장의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예술인의 몫을 만들어 건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회의 부분에서는 다양한 몫들의 분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적어도 20~30조에 가까운 정부의 금융,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예술인들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위기에 함께 버틸 수 있는 몫을 요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늦었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페이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봄에, 봄은 왔다.

- 사회적 안전망이 달아야 할 곳들

김건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꽃이 폈다. 흠날리는 꽃잎 따라 배시시 콧바람 보텔 적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 인다. 하얗게 떨어지는 빗꽃이 무상하게 거리는 비였다. 밟지 않은 꽃잎만 곱게 날린다. 봄의 지척에 있는 상점, 식당은 허릴없이 봄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봄의 기운에 들뜬 사람들도 찾기 힘들고, 그와 함께 여지없이 울려 퍼질 노래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3월은 갔고 4월을 맞았다. 많은 경우에 재난 상황은 함께 함으로 극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만남 자체가 위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 이는 이질감과 공포.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개인의 불안함과 무력감은 그 빈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한산한 거리와 비어있는 점포들, 자영업자들의 위기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경제 공황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 가중되어 어지럽기까지 하다.

사람들의 만남, 특히 많은 집객을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계의 타격도 심각하다. 얼마 전 3월 부산 공연예술계 총매출이 11만 원에 그쳤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0년 1월 47억 원에 비하면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많은 행사,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기약 없는 연기를 하는 가운데, 이를 생산하는 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육체적, 심리적 불안에 이어 경제적 불황에 대한 공포로 격앙되어 가는 가운데 오히려 들춰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들.

위기가 일상이 된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봄은 확연히 다르긴 하다. 하지만 내겐 겨울을 지나며 겪는 고독과 불안함, 그리고 이 배고픔이 그리 낯선 일상은 아니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그리고 메이저가 아닌 독립 혹은 비주류 예술가로, 20대에서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통계에의 대상이 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실

상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극장과 단원을 보유한, 그나마 매출이라는 통계치를 낼 수 있는 단체, 개인에 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서조차 잡히지 않는 많은 이들이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금껏 버텨 왔던, 그리고 또 견뎌야 할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져야 한다.

2018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예술인 실태 조사¹⁾에 따르면 한국의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예술 활동으로 연평균 수입 1,281만 원을 번다. 이 통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으로 등록된 5,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또한 건축가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원과 40대 이상 기성세대 예술가도 포함된 평균치이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평균 수입 제로(0원)인 29%의 예술가들이다.

가난하니까 예술가다 느니, 이렇게까지 배고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예술가를 대하는, 혹은 예술의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한다. 2010년 기준 48년간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이 가장 장수하며, 예술인, 체육인, 작가, 언론인은 평균 수명 70세에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실존과 진실을 찾는 일을 함은 비슷할 진데 종교인과 확연하게 수명차기(10년 이상) 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포함되겠지만 문득 떠올려 보면 고령에 대한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 차이가 아닐까? 즉 사회적 안전망 밖의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단명 그룹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고용이, 아니 생존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어떨까? '실존과 진실을 찾는 일을 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삶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며 보다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낭만적 상상을 해 보기도 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되어야 할 시스템은 낭만적 상상력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안전망이란 것이 갖춰진다.

1)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746

포스트-봉준호를 위한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

- 지속가능한 부산 문화예술정책을 위하여

차민철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

재난과 문화예술

2020년 4월 6일 오후 1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다양한 영화제와 영화 단체 관계자들 몇몇이 부산시청 로비에 모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 직후였다. 방역을 위한 통제선과 이면저터 설비들이 갖추어진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부산시청 로비에 모인 참석자들의 표정은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무언지 모를 절망과 답답함과 분노를 내뿜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 20퍼센트의 지자체 부담금 마련을 위해 상반기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 취소를 논의 중이라는 부산시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1시간 가량 앞두고 참석자들은 상황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바로 면담 장소로 향했다.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면담 직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지도 못했지만 사안의 중대함 때문인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어떠한 이견도 없이 통일된 입장과 의견을 모았다. 우연이었을까? 면담 직전 논의를 하던 중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공유되었다.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전시·공연·행사 등이 취소·연기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단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금융지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문화예술 행사 예산 삭감 혹은 취소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에게 부산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예산 삭감이나 행사 취소 시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행(?)인지 부산시 담당부서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말을 전해왔다. 급한 불은 꺼진 것일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불확실함을 지닌 채 참석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다. 그러나 전면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부산시의 문화예술 인식에 대한 회의감과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에서 관련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을 먼저 해왔으면 어

낭만적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창궐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은 확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이질적인 불안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기도 그 당혹감은 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불평등과 배제, 차별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사회 시스템 조차 적용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 파괴의 고리는 사람, 동물, 자연을 가리지 않았고 지금 우린, 전 세계적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실은 우리가 충분히 미연에 발견하고 확인하여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10년간, 국가적 재난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토로하는 것이 순서처럼 느껴진다. 허나,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두 달 남짓, 코로나19는 가장 연약한 구조에 있는 것부터 핏줄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그에 속해 있는 노동자. 그리고 조그만 작업실과 연습실을 꾸려 창작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벌써부터 이들이 쓰러지고 있는 소리가 허다하게 들린다. 특히 임차로 생계의 터를 마련하고 있는 이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영세한 이들에겐 이 시기를 버틸 만한 담보도 없기에 대출도 힘들다. 동네 조그만 상점들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 길에서 혹은 지역 축제에서 노래들을 수 있었던 예술가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실태 조사에서 조차 외면받고 배제되었던 이들의 삶이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예술계에서 발표된 대책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300만 명에게 8,000원씩 관람료 할인권 지원, 행사 취소,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규모의 예산 편성, 소극장 200여 곳과 공연예술단체 160곳 선정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의 계획이 눈에 띄는 실정이다.

여전히 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 그 태도에 대한 인상이 가시질 않는다. 3월 23일 독일의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500억 유로(한화 67조) 규모의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창조할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이며, 이는 예술가가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은 필수적이다.'라고 문화예술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핏줄어 상처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한다. 세상은 더 거대하고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더욱 빠르게 시스템화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이 끝나지 않은 겨울은 자영업자들 보다는 대기업이 버틸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마련이다. 예술계 또한 거대 기획사 혹은 방송계가 지니고 있는 자본력과 비대면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 플랫폼을 획득한 자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껏 만들고 있던 문화적 민주주의, 다양성 또한 급속도로 사라지는 사회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 만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문화, 경제, 사회, 자연)를 기대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

2020년의 4월, 아니 끝나지 않은 겨울. 우리는 다시 '역사는 진보하는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섰다. 단순히 지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만들어 오고 있던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선택들이 불거져 오게 한,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역사와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지를 묻는 엄중한 심판의 시기인 것이다.

마스크 너머의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의 용기를 발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보호, 지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자 하는 안전망이 차별과 혐오, 착취와 배제를 넘어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을 때, 그곳에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낯설지만 낯선 눈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며, 춤추고 있다. 앞으로 마주 할, 더 많은 종류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만남의 노래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에 봄이 온 까닭이다.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 활동 - 먼구름 한형석 선생

이상헌 부산일보 기자



그림 1 자유아동극장 전경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문화예술 대피소

그는 모친한테서 받은 백색 전하기를 팔고, 사재를 탈탈 털고, 주변 지인이게 읍소를 해 극장 터를 매입했다. 목수를 구할 돈이 없어 공사 전 과정을 그가 책임졌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자유아동극장은 6명이 앉을 수 있는 길쭉한 의자 70개가 있어 한 번에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명작동화를 각색한 영화를 비롯해 아동극과 그림연극, 인형극을 2년간 500회가량 공연했다. 극장을 찾은 아이들은 11만 5000명에 이르렀다. 밤이 되면 자유아동극장은 색동야학원으로 변신했다. 버림받은 전쟁고아를 비롯해 9~17세 청소년 94명이 밤마다 야학에 나왔다. 국어, 산수, 과학, 보건 과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사생, 공작 같은 예술 교육도 진행됐다. 배움만큼이나 주린 배를 해결할 목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 아이들과 교사였던 부산대 학생의 끼니를 해결하느라 정작 한형석 선생 식구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들렸다. 낮에 극장, 밤엔 학교였던 그곳은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문화예술 대피소였다.

자유아동극장 아이디어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다. 예술구국이란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그는 중국 최초의 아동극장을 만든 주역이기도 했다. 1935년 산둥성 지난 산둥성립여자사범부속소학교 교사로 근무했는데, 현대식 교사를 건립할 당시 그의 제의로 중국 최초의 아동극장이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1937년 6월 폴란드 애국음악가 이야기를 다룬 그의 첫 아동극 '리나'를 발표했다. 그가 조직한 아동극단에서 공연했는데, 시나리오, 작곡, 연출, 주연까지 그가 맡았다. 몇 년 뒤 중일전쟁으로 거리를 헤매는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 지원으로 만든 산시성 시안 제2보육원에서 한형석 선생은 예술

도권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풍부한 영화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지역'과 '독립·예술영화'라는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지닌 부산 영화의 현재와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포스트-봉준호 법'으로 돌아가 보자. 이 법안의 명칭에서 한국영화의 현재 상황과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특성을 가능해볼 수 있다. '포스트-봉준호 법'이라는 명명은 한국 영화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영화의 가장 최근의 큰 성과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나 정책이 아닌 강제력을 지닌 '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영화가 처한 상황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욱 깊고 세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봉준호의 <기생충>으로 촉발된 '포스트-봉준호' 시대가 한국영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다원성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영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칫 봉준호가 이루어낸 성과를 가시적·정량적 목표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만 전면화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과 영화 분야 인력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법 제정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나아가 인식 전환과 문화 정착으로까지 확장되어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부산 영화를 위하여

이 원고를 청탁받고 코너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중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정서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예술 활동'이라는 주제를 확인하고 문득 떠오르는 개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었다. 생태적·환경적 관점에서 등장한 이 개념은 1987년 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공식적 정의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담론은 세계 각국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다분히 관념적인 개념을 사회 각 분야나 문화예술의 구체적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영화, 특히 부산 영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산은 2014년 12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자타공인 '영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속해왔다. 다양한 물적 인프라는 물론, 인적 자원 역시 타 지역(서울 및 수도권 제외)에 비해 풍부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표적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크고 작은 영화제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의전당, 국내 최초의 영상위원회인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 외형적으로 보면 부산 영화는 발전 일로에 있

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네마테크 부산 철거(2011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2014~2018), 부산 국도예술관 폐관(2018년 1월) 및 아트씨어터 씨앤씨 무기한 휴관(2018년 3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인사 문제(2018년 2월 및 2019년 10월) 등 진통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부산 영화의 내부적 현실은 외부적 시선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르다. '영화산업은 없고 영화제만 있는 도시', '매력적인 영화 촬영지', '심각한 영화 인력의 역외 유출' 등 부산 영화계는 여전히 상충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영화산업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영화 창작 인력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미시적 관점의 문화·예술적 인식과 거시적 관점의 산업·경제적 논리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을 찾아야만 할 때다. 미시적 관점의 영화문화 없는 거시적 차원의 영상산업 육성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고유의 영화문화를 토대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논리를 탈피해 소프트웨어, 나아가 휴먼웨어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자원과 지역 고유의 영화 문화를 중심으로 둔 중장기적 영화정책과 관 주도 가 아닌 민·관·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안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체로서 부산영화진흥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적에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인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 특히 제작 지원과 더불어 부산 영화의 배급과 상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가칭)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화 도시 부산에서 사라져버린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부활은 더할 나위 없이 시급하며,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과제다.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사업에 부산 영화의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영화와 타 분야의 통섭적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제안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이며 당연할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이며 당연한 것들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부산의 영화인들을 각자도생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몰아넣지 말고 예술적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화 도시 부산, 이제 거시적 관점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미시적 관점의 '분산과 다원성'이라는 토양을 다져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부산 영화의 싹을 틔울 때다. <기생충> 효과와 '코로나19'사태라는 이월배반적인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영화인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림 2 그림연극 공연

적 재능이 있는 아이 서른 명가량을 따로 모아 아동예술반을 만들었다. 중국 국민당 간사단 음악교관, 광복군 예술조장으로 전시 문화선전활동을 하는 와중에 제2보육원 아동예술반 주임까지 맡아 1인 3역을 했다. 아이들에게 미술, 문학, 음악, 무용을 가르쳤는데, 중국의 저명한 화가로 성장한 량원양, 시안시 예술학교 교장을 지낸 양치 선생을 비롯해 제2보육원 아동예술반 제자들이 여럿 생존해 있다. 몇 년 전 만난 양치 씨는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원에 갔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없었는데, 한형석 선생님의 예술반 활동이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회고했다. 1944년 시안에서도 아동극장을 만드는 데 한형석 선생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항전 시기 부모를 잃고 고향을 떠난 아이들의 역경을 그린 아동가극 ‘낙원행진곡’을 비롯해 ‘어린 양들’ ‘집 없는 아이’를 발표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

아동극장과 아동가극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귀국 뒤에도 이어졌다. 1948년 뒤편계 귀국선을 타고 한국에 돌아온 뒤 그는 정부 고위직을 마다하고 부산으로 낙향했다. 그가 의욕적으로 매달린 건 국립극장으로 추진하던 부산문화극장 개관이었다. 곡절 끝에 국립극장은 무산됐지만, 35년 된 낡은 보래관을 고치는 데 막대한 사재를 털어 넣었다. 수리비의 절반가량은 빚까지 내서 그가 충당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건 그저 그런 극장이 아니라 문화예술 철학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리라. 1950년 6월 18일 문을 열기 전 몇몇 신문에 실린 기사에 그런 생각이 엮여있다. 1950년 6월 11일 자 자유민보에 문화극장을 만든 한형석 선생의 포부가 실렸다. “예술은 몇몇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특수지역 시민만 향유해서는 안 된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는 “무대 예술 운동을 중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분산해야 하며 그것을 육성하는 근거지를 지방에 뒀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문화극장

은 교육과 맥을 이어 아동의 예술적 맹아를 보호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글을 맺었다. 문화 예술이 소수자의 특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함께 문화 자치분권에 일찌감치 눈을 뜬 그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극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그즈음 산업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도 “이 극장이 중점을 둘 것은 연극과 오페라이며, 아동극과 교육예술에도 치중할 것이며, 교육예술은 무료로 청소년 면학도를 위해 공개할 작정”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을 연 지 불과 일주일 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문화극장은 국회의사당, 미군 전용극장으로 징발됐다. 원천 데 뒀던 격으로 1953년 4월 화재로 전소되면서 극장은 기능을 상실했고, 한형석 선생이 품었던 문화예술교육 꿈도 접어야 하는가 싶었다. 좌절하고만 있기엔 시대가 너무 엄혹했다. 사재를 털어 고친 문화극장이 소실되면서 꿈을 접어야 했던 그가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눈에 밟혀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유아동극장을 만드는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2년 만인 1955년 자유아동극장도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일은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았다.

아동극장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 선도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거점 마련에 나섰던 점만 고려해도 그는 남들보다 한참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다. 시대를 앞선 생각은 이를테면 1972년 제1회 부산 시민의 날 기획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리예술의 일환으로 가 장행렬을 하면서 ‘집 앞 쓸기 행렬’을 무용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일상 예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시민의 날 하루만큼은 통금을 해제하고 ‘차 없는 거리(無車道路)’로 만들자는 제안도 많이 앞선 생각이 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그곳을 예술 공연으로 채운다는 발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의 날 계획서에선 “거듭 말하지만 이 일련의 행사를 꺾는 원칙은 자발적 참



그림 3 복화술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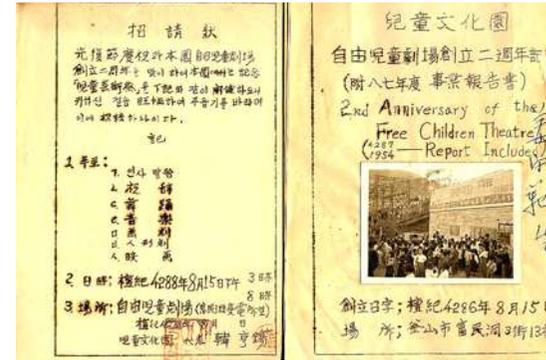


그림 4 자유아동극장 2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여에 있다. 시민의 날은 시민 개개인이 방관적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데 그 의의가 깊다”라고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문화예술교육의 요체가 주체성과 자발성에 있음을 간파한 생각이다. 신명이 나지 않는데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문화 예술교육임을 체득한 덕분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항일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예술의 역할이 크다는 걸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 문화예술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예술 구국의 신념으로 독립 투쟁에 나섰던 때처럼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아동극장, 부산문화극장, 자유아동극장으로 이어온 그의 철학은 후대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명명하기 전부터 이미 확고하게 정립됐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아마추어 음악인인 아브레우 박사가 방향하는 빈민촌 아이를 모아 카라카스의 작은 차고에서 음악 교육을 시작한 게 1975년이었다.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열풍을 부른 엘 시스템마도 자유아동극장보다 20년은 더 뒤의 일이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 한형석 선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시간을 버터내는 거리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이 삶을 바꿀 사다리가 된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예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짰을 것이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누구보다 가까운, 흔치 않은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기,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예술 활동 최전선에 그가 있었을 것이다.

부산문화재단 연구용 한형석 기념사업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연구용 한형석 선생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한형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과 공연이 제작되고, 한형석 선생이 독립운동을 펼친 중국 시안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부산과 중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	
학술발간	국제 심포지엄(11월 중), 연구용 한형석 평전 발간(10월 발간 예정)
공연제작	2020년 브랜드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 후, 11월 공연 예정
국제교류사업	중국(시안, 상하이), 대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기획사업 추진 예정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51-745-7292), 문화공간팀(051-745-7247)	

사회복지사가 보는 문화예술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는 사회복지사다. 인간화(humanization)는 사회복지의 목적이다. 브라질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개념어인 인간화와 맥이 같다.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주체인 인간으로 살기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말로 사회정책을 설명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상식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본주의자 매슬로우(Maslow)가 인용하고 추구한 '자아실현'은 인간화의 구체적 모습이다. 클레멘트 코스¹⁾로 현대 인문학 대중운동을 열었던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요구한 '위험한 시민' 역시 동일한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 중심 문화화에서 생명 중심 문화화로 도약해야 한다. 현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바다.

사회복지의 최대 적은 '수치심'이다. 불평등과 상품화는 서로를 견인하여 배제하는 사회를 만든다. 배제적 사회라는 괴물은 인간의 수치심을 먹고 산다. 누가 누구를 수치스럽게 하는가는 괴물 권력의 척도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항구적 대립 이면에는 수치심을 사용하고 기생하는 자와 수치심에 갇힌 자의 긴장이 박혀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선별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보편적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 기존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생명 존중이라는 문화 토대 구축으로부터 가능하다.

사회복지의 품위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수치심' 따위를 가지고 힘을 내세우는 천박한 사회를 거부한다. 삶의 품격은 품위 있는 사회가 낳는다. 품위 있는 사회는 고결한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이와 공유하는 아량이 있다. 사회복지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최상위 욕구까지 자유로이 욕망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근대 사회 정책가들은 귀족이 소유하고 누리던 빌라와 궁전을 모든 시민에게 살게 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사회주택으로 실현하였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현대식 부엌은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uette-Lihotzky)가 디자인한 '프랑

크푸르트 부엌'으로 시작한다. 현대 아파트와 시스템 주방은 자산과 계급의 상징이다. 시작은 무산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궁전을 열고,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노력이었다. 슈테-리호츠키가 테일러리즘에 매몰된 디자이너가 아니다. 기술과 예술을 통해 모든 시민이 품위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예술과 예술품과 예술문화를 영위하는 자격은 모든 시민에게 있으니까. 품위 있는 예술적 사회가 주는 삶의 품격,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만드는 생태계. 예술문화와 사회복지의 상보적이다.

내게 문화예술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무척 까다로워 어렵다. 경직과 이완, 창발과 모방, 각성과 적응, 주제와 연결, 고립과 독립, 충격과 탄성, 사적 자유와 공적 평등... 이항 대립적 개념이 마구 섞여 있어 복잡하기 그지없다. 개념적 이해와 별개로 문화예술이 미치는 힘은 강력했다. 소통과 관계의 힘은 무엇보다 컸다.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맞본 이들의 수많은 얼굴들에서 빛과 윤이 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생명력을 깨닫게 하거나 부여하여 일으키는 사례를 많이 만났다. 굳이 엘 시스템아 프로젝

트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행위자가 사회적 영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치밀함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영향력이었다. 인간화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한 생명화 작업에 대한 영감을 문화예술판에서 얻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며, 기획과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현장 예술 판을 옆에서 넘겨서 본 바를 부연한다. 레드 오션이 아니라 레드 슬럼에 가깝다. 레드 오션이야 출혈 경쟁하는 시장이지만, 레드 슬럼은 이해관계를 고착하여 악육강식이 자연스러운 폐쇄공간이다. 현장 예술 판에서 살아 움직이는 몸짓들만 봐도 가히 존경스럽다.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다. 다른 현장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하다. 인간화와 상품화 간의 간극이 너무 좁아 긴장을 떨쳐낼 수 없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는 무척 아름답다. 그 장미를 보자고 쓰레기통을 집안으로 모셔올 필요는 없다. 황무지를 갈아엎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1) 1995년 뉴욕에서 시작된 노숙인, 마약 중독자, 재소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육과정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2018년)

시작하며

부산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 리사업(국비)'을 주관하며, 인종·민족·장애·성별·세대 등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2016년 부산시 문화다양성 선언문 마련, 2017년 부산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2018년 전국 최초 문화다양성 시비 사업 편성을 주도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은 시대,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개념을 명료화하고 부산의 특성을 반영할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부산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목표

조사 목표로는 ①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②분류 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 파악, ③분류 체계에 따른 여건 현황 파악, ④분류 체계에 따른 부산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파악, ⑤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제시 등 총 5개 목표를 설정했다.

조사설계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했고, 문헌 분석-자문회의-시민 인식조사-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했다. 다양한 영역별 연구자 6인, 활동가 6인을 각각 자문그룹과 관계자 그룹으로 선정했다. 분류체계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체계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중점을 둔 부산시민 대상 인식 조사는 15-79세 1,200명을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은 대인면접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설문 문항에 가급적 모호한 개념 지표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를 활용하려 했고, 국내·외 타 조사 결과와 비교해 부산시 특징을 발견하는데 조사의 역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다양한 조사 결과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중 총 4개의 키워드를 소개해 본다.

1대 키워드 :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전국 평균보다 높아

부산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나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정책개발 담당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에 26% 만이 그렇다고 했지만, 부산 시민은 34%가 동일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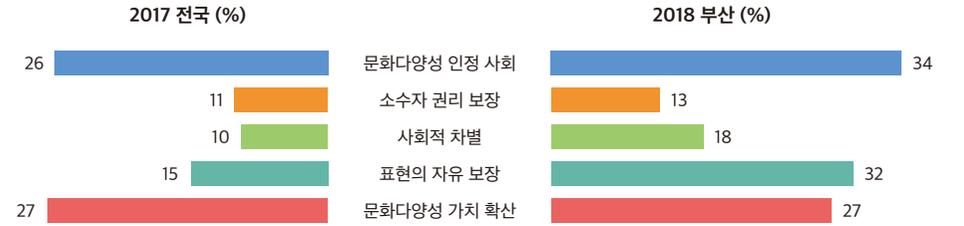
2대 키워드 : 문화다양성 인식에 비해 소수집단 수용도는 전국 평균 이하
반면, 소수집단 수용도(가족 및 동네 이웃)는 전국 대비 낮았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개념 이해 부족이거나 소수집단 차별에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난민과 성소수자가 수용도가 가장 낮았고, 외국인 이이라도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인식을 했다. 전반적으로 소수집단과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용도가 높았다.

3대 키워드 :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높고, 성평등 인식 전국 평균 이하
사회갈등 중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이 노년층에 비해 크고, 성평등 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지방 차별의 불신이 남아있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는 전체 응답자의 10%가 동의했으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31%가 응답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로의 성별은 상관없다는 응답은 전국 82%이나 부산은 73%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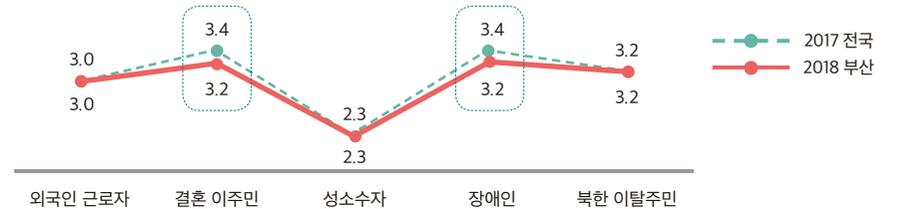
4대 키워드 : 20대 여성 차별에 가장 민감, 30대 남성 성별 불평등과 노인 인식 부정적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에 동일 연령 여성보다 30% 이상 높은 응답을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나 유일하게 30대 남성만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정책적 제언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접촉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성별·연령별 인식 차이가 큰 만큼 맞춤형 접근과 무의식 속에 퍼져있는 부산의 가부장성을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이 문화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0대에게는 다문화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여성 혐오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20-30대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지방 차별 인식 완화를 위한 제반 환경 마련과 장애인 친화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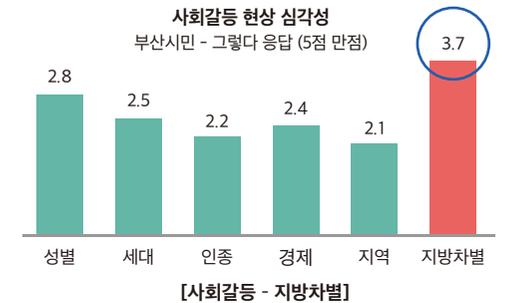
[전국 대비 부산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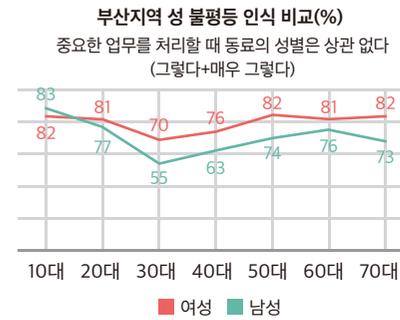
[전국 대비 부산 소수집단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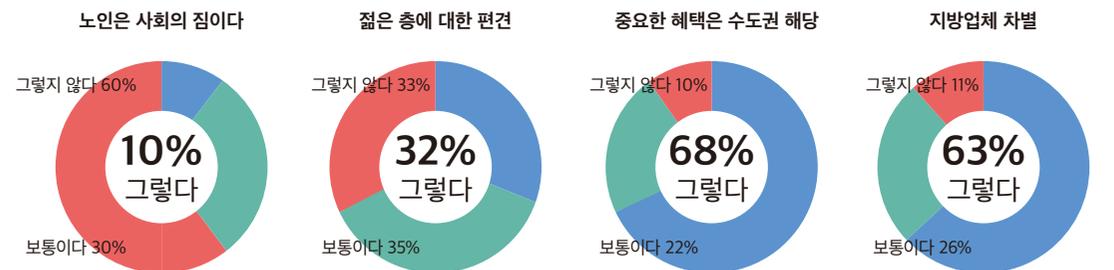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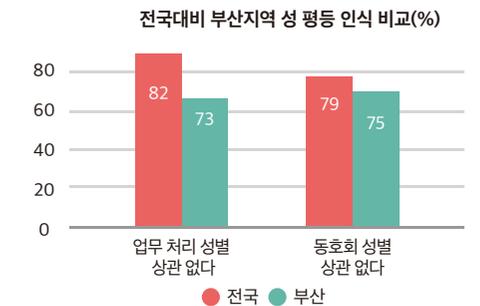
[부산시민 사회갈등 인식 결과]



[사회갈등 - 지방차별]



[사회갈등 - 성 불평등]



[사회갈등 - 세대]

2020

제4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코로나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Editor's Letter

칼럼

예술인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문화정책이슈 1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문화정책이슈 2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이슈 3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예술 + ○○

예술+정치

연구보고서 갈무리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안녕

코로나19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칼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창작활동이 노동이 되고, 예술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예술 노동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까?”

이슈1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그들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슈2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열릴 것인가?]

“소극장은 젊은 연극 작업자들의 프로 데뷔 무대이고, 연극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며, 대다수의 창작 작품이 첫 선을 보이고, 제작자 에겐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술시장이다.”

이슈3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 활동 [극단 자갈치, “복지에서 성지로”]

“광대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가 내어주는 이야기로 인해 자신이 치유받으면서 넓은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아가 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숙명일 것이다.”

예술+정치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예술이 함께 공통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보고서 갈무리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알고 있던 것에 궁금함 또는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나누다 보면 기존의 것에서 확장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술도 과학도 융합도 모두 같은 원리인 셈이다.”

기운이 오르면 주춤해질 것이라 예상되던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잠시라고 예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에 가장 취약한 영역들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그러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달려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예술영역이지만, 사회의 가장 약한 상처들을 끊임없이 예술로 담아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술이 사회 각 영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술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문화정책이슈페이퍼 4호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함께 담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세심한 시선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장기적 전망을 모색하는 문화정책의 고민을 문화정책이슈페이퍼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 그리고 예술인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날인 11일,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고용안정 보장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에 1년 6개월 이상 계류되어 있던 법안이 고용 위기 시대라는 급물살을 타고 통과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안 제77조의 2 신설),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을 규정(안 제77조의 3 신설), ③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77조의 4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내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인의 구직 급여 요건 (안 제77조의 3)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기 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1)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당면한 문제들

그러나, 예술인 창작 활동, 노동의 특성상 그 대상을 모든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을 포괄하기에는 아직 짚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제77조의2)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예술인의 정의 일부를 담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제도에서 담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보험의 혜택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예술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 예술활동의 특성상 문화예술 영역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법 필요한 상황이다. 타 분야에 비해 영화는 비교적 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된 장르라고 할 수 있고, 공연분야도 계약이 있긴 하지만 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장르의 특성상 계약 체결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예술인들은 작품을 준비하는 창작 과정 또한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실제 사업주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행의 개선과 계약에 포괄하는 노동의 범위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제77조의 2 제5항) 하고 있다는 점도 아직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이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가 취약했던 부분들에 눈을 돌리게 했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안정된 노동 환경 밖에 있거나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취약했던 분야부터 실업이 발생하고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 19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공모사업들도 지연되면서 예술인들은 가장 앞서서 위협을 받았다. 지난 2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현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예술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대를 잃고, 관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타개책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발표한 직후 마련된 5월 간담회에서도 예술인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했지만 요건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자격인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는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소득증빙 기준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과 예술 창작과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두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한 안타까운 점은 미술이나 문학 등 순수 창작 예술분야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환경 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예술인들에게 ‘실직상태’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창작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창작활동이 노동이 되고, 예술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예술 노동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전의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될 테니까 말이다.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최근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예술인들이 부산문화재단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

지난 4월 말 부산시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문화예술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창작활동 지원, 굶노닝 예술인 지원, 힐링과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코로나 19 피해 극복 문화예술계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 중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은 긴급생계비 지원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제일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그동안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어도 실생활에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나의 예술활동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등 이제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으리라.

코로나 19 사태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 지역축제, 각종 예술강좌 등이 사실상 멈춰버린 지금 부산의 문화예술인들도 예외 없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나 어려움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그들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쯤으로 생각되어 왔었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실상 코로나 이전부터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지난 2011년 1월 지병을 앓고 있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최고은 작가가 이웃에 남긴 쪽지 중 일부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부산에서도 2013년부터 ‘부산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 광역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2017년 문을 열기에 이르렀다.

특히 2016년부터는 예술활동증명 대행사업을 통해 4,000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증명을 마쳤고 매년 300여 명이 창작준비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며, 10억 가량의 시비를 확보하여 부산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내고 있다.

또한 센터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정책과도 연계점을 마련하고, 굶노닝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반딧불이 사업 등 지역의 독자적인 영역 발굴 및 지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부산지역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5, 2018년 2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현장의 요구와 정책과 사업의 한계점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자

료를 바탕으로 민선7기 문화예술분야 정책, 부산문화 2030 비전, 부산문화재단2030 비전 등의 정책비전과 전략에 예술인 복지 영역을 주요한 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전국에서 처음 선도적으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단순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대행과 안내 역할에 그치면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만의 정책들을 펼쳐 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즉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복지정책 개발에는 미비했다는 점 또한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 시대에 예술인들의 생계와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2014년부터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논의와 준비 등을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이제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침내 통과되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 만하다.

이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즘 한창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제’에 앞서 ‘예술인생활임금제’를 우선 도입해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부산문화비전 2030에서도 <부산예술인 복지 2030 계획>을 통한 예술인의 집(주거, 창작지원이 가능한) 조성, 고충센터 건립, 공공주택제도, 복지금고 도입 등 예술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창작환경개선의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촉발되고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확대와 위상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부산지역 고유의 복지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삶, 지위, 권리, 사회적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알려내야 한다.



'20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 예술인을 JOB이라' 행사

<참고> 2020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창작역량강화	예술인창작준비금 신청 대행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부산예술인 아카이빙사업	
	예술지원 홍보사업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사업(개인형,협력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불공정관행개선	예술인컨설팅 매칭사업 - 법률, 계약, 저작권 등 상담 및 교육	온, 오프라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운영	
사회안전망구축	사회보험료지원,산재보험,예술인금고,의료비 지원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센터운영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운영	
	예술활동증명 대행	

문의: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32~3) www.bsfc.or.kr.



청춘나비아트홀 연극 세미나
© 청춘나비소극장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열릴 것인가?

강원재 청춘나비소극장대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 연극계도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춤거리고 있다. 대다수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공연장도 휴관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과 너무나 다른 일상의 변화는 지역 공연계를 멈추게 하였고, 본업이 사라진 예술가들은 그나마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던 예술강사까지 멈추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정부와 지자체는 예술계에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재난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느낀다.

코로나 19가 오기 오래전부터 부산의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연극시장은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로 정체되고 굶아 있었다. 전문 예술 인력의 부족과 중앙 집중 현상, 민간 공연장 쇠퇴, 순수 공연예술 시장에 대한 사회적 외면, 전문교육 부족 등. 최근 부산의 대표적 민간 소극장 두 곳이 폐관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4월 말, 부산시에서 부산 예술계와 소극장에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때마침 코로나 19로 긴급수혈이 시작되었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각자가 안고 가야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부산 소극장'은 계속 위기였다

올해 초 두 개의 연극 전용소극장(한결아트홀, 청춘나비아트홀)이 폐관을 하였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이다. 운영난과 임대인의 압박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19가 오기 전, 두 극장이 문을 닫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후 소극장 협의회(부산 소극장 연극 협의회)는 부산시와 부산 소극장 위기에 대해 소통 중이었다. 부산 소극장은 오래전부터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각 극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폐관을 염두하고 있는 극장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왔다. 다른 여러 소극장들이 2월부터 휴관을 시작하였고, 5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소극장 협의회 소속 7개 극장 중 단 두 작품만이 공연되었다. 현재 부산 연극시장은 몇 개의 상업적 공연 외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소극장들은 버티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에선 코로나 19가 올해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 소극장의 대다수가 내년을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버티기에는 각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소극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문화예술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며 아쉬웠던 것은 소극장에 대한 인식이었다. 연출이나 배우 그리고 극단의 존재가치는 이해를 하지만 극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예술단체로 보기보단 단순히 개인사업자나 공간을 상업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극장은 젊은 연극 작업자들의 프로 데뷔 무대이고, 연극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며, 대다수의 창작 작품이 첫 선을 보이고, 제작자에게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술시장이다. 소극장이 건재하면 공연예술시장의 기반은 튼튼할 것이다. 그러나 소극장이 사라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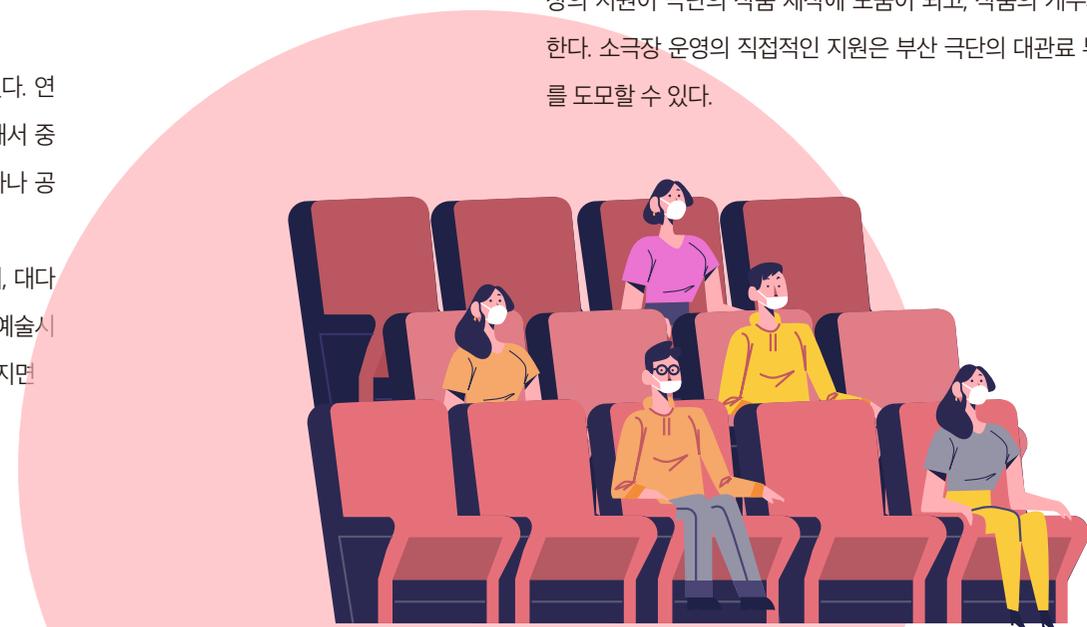
부산의 공연예술시장은 도태될 것이다.

부산 소극장은 지역 공연예술시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지역 순수예술의 기반이 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은 문제의 본질을 조사 검토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극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산시에서 후원하는 소극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창작지원인데 소극장에서 창작공연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외에는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지원사업', '특성화 극장 지원사업'이 있으나 심사기준에 지역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소극장이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분명 지역 소극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극장의 지원사업은

기존 창작지원형태와는 달라야 한다.

소극장 운영이 어려워진 제일 큰 이유는 부산에서 제작된 연극 공연의 개수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소극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3개 내외의 창작공연을 제작하고, 이 외에는 대관공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한 해(2019년) 극장 가동률은 연평균 50%가 안 되고,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 공연이 20% 이상 감소하였다. 공연의 개수도 줄고, 공연 회차도 줄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산에서 제작된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좋은 작품도 있고 안 좋은 작품도 있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선의 경쟁이 생기고 점차 작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지원정책만으로는 모든 공연을 수용하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예술지원정책은 심의를 통하여 수혜단체를 선별하는 선택집중 방식이다. 정해진 예산이 있고,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함이다. 신청한 모든 단체에게 골고루 지원을 해주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극장의 지원이 극단의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작품의 개수와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장 운영의 직접적인 지원은 부산 극단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1) 이 글에서 부산소극장은 지역의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민간소극장을 의미한다.

**지금은 긴급수혈이
필요한 때다.**

앞서 얘기했듯 올 한 해를 버티지 못하면 부산 소극장은 내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직접 민간 소극장들을 장기 대관하여 올해 지원받지 못한 공연예술단체나 젊은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전에 상호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관계기관(문화재단)이 민간협회와 협력하여 행정상의 문제점을 상호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공동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소극장은 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 왔다. 이번 코로나 19가 계기가 되어 소극장들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개선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춘나비아트홀 철거 후 모습
© 청춘나비소극장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극단 자갈치 '복지에서 성지로'

손재서 극단 자갈치 단원

그림1 2014년 '복지에서 성지로' 공연 후 피해자와의 대화
© 극단 자갈치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이 통과되었다. 926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와 한종선 씨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지 감히 나는 알지 못한다.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된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가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내무부 훈령 410호. 말 한마디였다. 법령도 아닌 훈령. 이 말 한마디로 12년 동안 2~3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513명이 사망하였다. 고위 공무원 혹은 대통령의 한마디 말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에 비해 진상규명을 위해, 혹은 자신의 과거가 부랑인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국회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926일 동안 차가운 천막에서 노숙을 해야 했던 두 사람의 말은 얼마나 힘겨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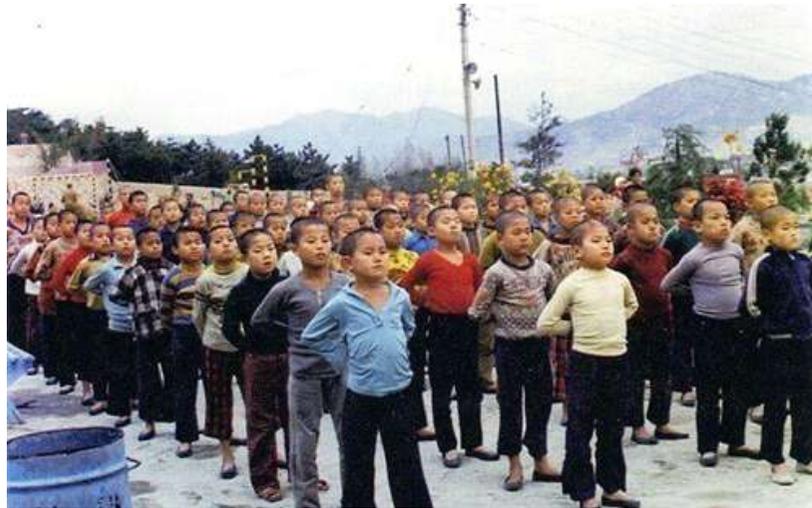


그림2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아이들
©한겨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려내는 '복지에서 성지로 1'

극단 자갈치는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1986년 만들어진 단체이다. 극단의 실제적인 창단공연은 1987년 '복지에서 성지로'라는 작품이었다. 그 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유린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어 조사를 벌이기 시작하자 자갈치 단원들은 주례동 형제복지원으로 달려가 현장 취재를 하고, 신문 기사를 모으고, 밤낮으로 의견을 나누며 대본 작업을 하고 공연을 만들었다.

70년대 유신독재 속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마당극(굿) 운동의 기본정신은 상황적 진실성, 현장적 운동성, 집단적 신명성, 민중적 전형성을 삶의 현장에서 느껴보게끔 하는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통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막혔을 때, 마당극은 대안 언론의 역할을 맡아 가려진 진실에 접근하는 공연을 만들어왔고, 극단 자갈치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왔다.

아울러 "복지에서 성지로"는 언론을 대신하는 역할에 집중된 작품만은 아니었다. 1987년은 6월 항쟁의 결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된 해였으나, 양김의 분열로 인하여 다시 권력을 군부 출신의 후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공연의 3마당은 외부의 도움으로 복지원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다시 경찰에게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에는 민중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복지원'에서 '성지원'으로 장소이동만 하고 말 것이라는 메타포를 담은 결말이었다.

"복지에서 성지로"는 1987년 부산 YMCA와 부산대 넉넉한터 공연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미리내 소극장에서 열린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 출품하였으며, 이후 많은 대학과 생산현장에서 공

연되었다. 초연은 채희완 선생님의 연출로 제작되었고, 이후 1999년 전병복 연출과 2007년 손재서 연출의 작업으로 새로이 제작되었다. 10년 주기로 다시 제작되어 배우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들이 표현될 만큼 풍성한 작품이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낸 '복지에서 성지로 2'

이 작품은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변방연극제에 임인자 예술감독의 초청으로 공연 제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극단 사정으로 공연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공연 영상만 초청 상영되었다. 그 해의 변방연극제는 당시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오던 한중선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주제로 다루어진 행사였다. 우리가 만들었던 공연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였는데도 우리는 이에 화답할 수 없었다. 당시의 미안함은 마음 한 편에 응어리로 남았고 이 빛을 갠기 위해 우리는 한중선 씨와 임인자 예술감독을 극단으로 모셔 이야기를 듣고 "복지에서 성지로 2"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에 들어갔다. 당시 영상으로 전작을 감상한 소감을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극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희화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작품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극적장치로 인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속편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지 않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당시 출판된 한중선 씨의 책을 함께 읽고,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면담을 하며, 그분들의 심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에 임하였다.

전작이 형제복지원 내에서의 당시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면 "복지에서 성지로 2"는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1마당은 당시 꼬마였던 피해자가 어른이 된 후 박인근 원장의 집에 잠입하여 '왜?' 라는 질문을 던지다 잡혀 다시 감금당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아직도 세상은 너희들의 이해에 의해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늘 뒤를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품은 일종의 서스펜스 활극물이었다. 2마당은 전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성 피해자의 복지원 내에서의 참상과 복지원을 탈출하고 싶은 끝나지 않는 꿈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3마당은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앞날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주말 공연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극 중 인물인 박인근 원장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시거나,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지켜봐 주신 피해자분들과 함께한 공연은 또 하나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 어떤 공연도 이때처럼 생생한 현장감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이 전해주시는 질타와 감사의 인사는 극단의 미래에도, 광대들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다.

사회에서 내어주는 이야기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광대의 역할에 대하여



그림3 2014년 "복지에서 성지로 2" (부산 민주공원소극장)
© 극단 자갈치

극단 자갈치는 창단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이야기, 공해문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전쟁 이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왔으며, 근래에는 부산특산물 어묵(오뎅) 이야기와 영산줄당기기 이야기 등을 다루며 소재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근처에는 늘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다루려는 정신이 깔려있다.

넓은 광(廣)에 큰 대(大). 광대라! 광대는 가진 말과 재주로서 세상을 놀이판 위에 올려놓고 노는 사람이다. 광대가 가진 말은 위선자들이 가진 말에 비하면 얼마나 힘없어 느껴지는가? 또 광대가 늘어놓는 이야기에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에 비하면 얼마나 허망한가? 하지만 광대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향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이 자신을 살게 하고 세상을 살만한 것이게 한다.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광대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가 내어주는 이야기로 인해 자신이 치유 받으면서 넓고 큰 세상을 향한 발 나아가 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숙명일 것이다.

극단 자갈치의 '복지에서 성지로' 작품을 필두로 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그려졌다. 특히 2012년 실제 피해자인 한중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책위 대표의 책 '살아남은 아이'가 출간되면서 형제복지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하게 예술작품에 조명되었다. 2018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연극 릴레이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편육'을 비롯하여 연극 '못찾겠다 꾀꼬리'가 극단 자갈치 신명천 지 소극장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소재 주요 예술작품>

- 1987.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채희완 연출)
- 1999.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전병복 연출)
- 2007.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손재서 연출)
- 2012. 책 '살아남은 아이' (한중선, 전규찬, 박래군 지음)
- 2012. 연극 '해피투게더' (떼아트르 봄날, 이수인 연출)
- 2013. 실험다큐극 '우리는 난파선을 타고 유리바다를 떠돌았다' (제15회 변방연극제 초청작)
- 2014.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2' (극단 자갈치, 채희완 연출)
- 2018. 연극 '편육' (극단 수정식당, 진준엽 연출)
- 연극 '못찾겠다, 꾀꼬리'
(극단 프로젝트 업라이트, 한승훈 연출)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독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 (Th.Heuss)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우리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잠깐, 사전에 나와있는 정치와 예술의 정의¹⁾를 찾아보면,

정치: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예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과연 이 두 단어는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접점의 경계선에서 예술과 정치는 해묵은 논쟁을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예술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예술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의 문제인가? 당연한 것인가? 등등.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있고, 밀레의 <만종>에는 당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있다. 이를 순수/참여로 논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작가와 그의 작품이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 또한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항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재와 주제의 편향성으로 인한 작품이 가졌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잃든 좋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공간에 살면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무관심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작은 단위의 정치 형태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거리를 둔다고 한들, 우리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동물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는 정치적 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연 예술가도 포함된다.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호응 관계인지 무관한 관계인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예술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의도적(혹은 의식적)인가 혹은 비의도적(혹은 무의식적)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 인간은 가치관이라는 상자에 갇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번 감행된 예술 활동과 정치 사이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예술과 정치가 만나는 접점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단함과 피로를 풀고 위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개인의 삶은 조금 덜 피로하지 않을까.

코로나 19로 전 지구인들이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예술이 함께 공통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영국에서는 예술 평의회를 창립하면서 예술을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그 유명한 “팔 길이 법칙(Arm's Length principle)”을 주장한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슬로건은 지금도 예술행정의 큰 틀을 만드는 유용한 원칙으로 자주 인용된다. 예술과 정치 사이에는 ‘틈’과 ‘긴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광의의) 정치를 외면하는 예술도, 예술을 외면하는 정치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7월 ‘부산진구 문화재단’을 발족한다.

예술과 정치의 아름다운 콜라보로 부산진구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름다운 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다.

1)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예술과 과학이 합을 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

-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조영미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대표

부산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목표

- 융합의 본질에서 출발하기

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던 것에 궁금함 또는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나누다 보면 기존의 것에서 확장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도 과학도 융합도 모두 같은 원리인 셈이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의 진행 과정

- 차이를 발견하는 집단지성의 공유

창의예술교육랩에서 진행하는 예술과 과학 융합은 기존의 STEAM¹⁾ 교육에 기초하면서도 융합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그 중 기관 연계 협력형 프로젝트로 기획된 것이 <예술+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예술가 3명(정만영/사운드설치미술가, 이정임/무용가, 문지영/미술가)과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진 2명(최준영/선임연구원, 박주은/연구원)으로 시작했다. 연구 설계를 위해 선행 사례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즈음 장르가 다른 예술가 1명(김덕희/설치미술가)이 영입되었다. 5주간 주 2회씩 연구를 진행했다. 2회 중 1회에서는 선행 연구자료 분석내용을 공유하며 각자의 교육철학이나 방법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갔으며, 또 다른 하루는 한 주 간에 떠올랐던 잡다한 생각들을 마구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날을 ‘르네상스 데이’라 불렀다. (르네상스 시대의 집단지성을 표방하여 이름 붙였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각자의 생각을 보태거나 덜어내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의 후속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실험과 시연 연구에 들어갔다. 개별 과정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시연은 참여 예술가와 과학관 연구진 모두 참여했다. 두 번째 시연은

1)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앞글자로 구성된 용어로서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예술가 4명 간의 교차 연구에 과학관 연구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주간 진행된 실험과 시연의 과정들은 프로그래밍을 위해 수없이 많은 피드백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런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움직임 장르와 현대미술에 협업이 가능한 과학관 연구진 두 명(박주영, 이행자/과학관 교육강사)이 마지막으로 추가 영입되었다.

천체우주+설치미술
공개수업 장면



창의예술교육랩 개발 프로그램

- 천체우주+설치미술, 물리+공연예술, 인지과학+현대미술

이렇게 7월까지 이어진 연구 회의를 거쳐 우리는 '천체우주와 설치미술'의 융합, '물리와 공연예술'의 융합, 그리고 '인지과학과 현대미술'의 융합이라는 세 개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

첫 번째 천체우주와 설치미술의 융합 프로그램 <내 눈에서 빛나는 별소리>는 천체의 종류와 차이, 빛의 성질, 파동과 소리의 특성, 이미지와 소리 유추, 소리를 디자인하는 방법과 녹음, 발광다이오드와 센서의 원리 이해, 아두이노2) 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별자리에 빛과 소리를 입히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물리와 공연예술의 융합 프로그램인 <쇼 미더 새도우>는 빛의 직진성과 그림자 원리, 그림자 크기 변화에 대한 이해, 신체를 활용한 그림자 형태 변환을 바탕으로 해양스레기 문제를 다루고, 그림자극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인지과학과 현대미술의 융합 <촉각이 깨어날 때>는 질감, 압력, 진동, 온도 이해와 이러한 촉각의 지각, 인체에 미치는 영

2)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판

향에 대한 이해, 나만의 그리퍼 제작 후 다양한 변화와 변수에 대한 실험, 이를 통해 인간의 능동적인 정보 습득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형, 캠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이중 캠프형 프로그램은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연구원 참여 실험 장면

2019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의 의의

- 참가자의 주도적 문제해결을 독려하는 영역 간 협력

이렇게 9개월의 긴 연구는 끝이 났고, 과정은 매우 복잡했지만, 결과는 담백했다. 어쩌면 대단하지도 않고 특이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 '그 시작'을 세 개의 성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융합 교육 연구 체계 구축이다. 모든 연구가 비슷한 과정으로 설계되었지만 창의예술교육랩의 연구 과정은 선행 연구자료 분석, 이를 통한 오류의 최소화, 그리고 개별 시연과 교차 시연을 통한 '제대로 된 융합' 클리닉 작업이다. 두 번째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원칙 마련이다. 예술의 원리든 과학의 원리든 어느 쪽이라도 대상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부터 제공하여 협력하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것, 그리고 창작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구상한 결과에 도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 분야에 비교해 다소 융합 기회가 적었던 공연예술 장르와 과학 융합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은 의미 있는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발견이었다.
 작년의 연구는 2020년 올해도 이어진다. 2차 년도에 들어선 연구는 프로그램 클리닉 작업과 동
 시에 보급과 확산을 위해 유연하게 보완될 것이다. 이전보다 기대되는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 설계되고 대상들에게 더 많은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
 대해본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은
 '부산문화재단 아카이브(e-archive.bscf.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공연예술 공개수업 장면



2020

제5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Editor's Letter

칼럼

특집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조사보고서 갈무리

예술 + 장애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 '같이'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예술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지원센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2020

EDITOR'S LETTER

칼럼 - 이상현(춤 비평가) p.75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같이']

“뉴노멀’은 기존 ‘노멀’과 같은 층위가 아니라 더 낮고 넓은 것이어야 한다. 기회와 위기를 ‘같이’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낮은 평균 말이다.”

이슈1 - 서승우(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p.79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단순히 프리젠틱만 하는 형식의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예술적 자원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제작을 해야 하는 지역예술 생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이슈2 -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p.82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예술은 항상 예술만의 언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자고 말한다.”

이슈3 - 장수혜(공연예술프로듀서) p.84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사보고서 갈무리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p.88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사라질 수 없는 보편적 일상이 문화예술활동이며, 이를 위한 예술인 생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장애 - 우정아(한국장애인복지문화센터장) p.92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나의 바람은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구분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작은 연결이 일상에서 시냇물처럼 흘러 높은 파고의 멋진 바다로의 향연이 되었으면 한다.”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는 가치 - '같이'

이상현 춤 비평가



'SOS with Survival Light' 퍼포먼스

예술계가 '코로나19'로 수렴되고 확산하는 듯하다. 예술 활동은 위축되고 위기의 그늘은 짙어간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예술은 더 이상 예술가라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인데, 예술가와 비예술가 구분도 모호해졌다. 그런데도 예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업 예술가라 부른다. 예술가를 규정하는 철학적, 미학적 규정은 예술이 직업이고 노동이라는 현실적인 기준 앞에서 무력해졌다.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불행하게도 전업 예술가도 거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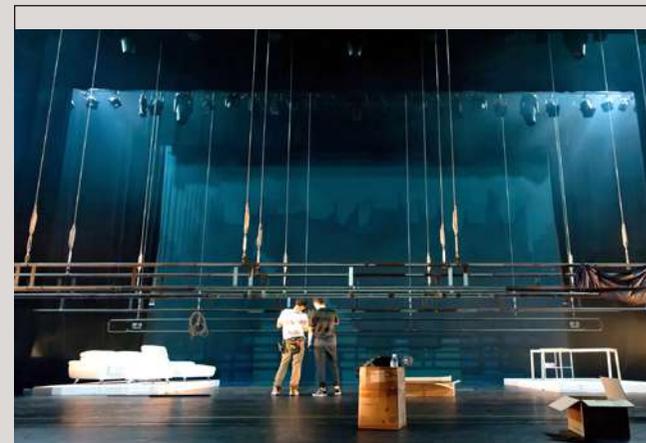
지난달 17일 오후 9시경 부산시청 앞 광장에는 낮은 풍경이 펼쳐졌다. 공연 조명 기계를 실은 트럭에서 조명기와 콘솔이 내려졌고, 광장 바닥에 설치한 수십 대의 조명기에서 나온 빛이 시청 건물 위 상공 한 지점에 모였다. 빛은 규칙적으로 점멸하며 국제적 조난 신호인 SOS를 표시했다. 이 퍼포먼스는 (사)부산문화공연기술협회가 코로나19로 축제, 공연이 취소된 후유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축제, 공연 기

술 종사자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벌인 'SOS with Survival Light' 퍼포먼스였다.

이에 앞서 부산민예총 무대예술위원회(아래 '무대위')는 '부산지역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무대위'는 부산시가 전면 취소한 축제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재개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내린 예방지침이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이유로 축제를 무조건 취소했다면서, 강원도 인제·고성에서 있었던 드라이브인 콘서트 예를 들었다. 감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축제를 시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인제·고성의 드라이브인 콘서트, 보성의 비대면형 머드 축제는 부산시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경우다. 부산시는 축제 취소가 가져올 문제에 관해 고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 스태프가 일할 기회를 잃을 것이며, 폐쇄적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숨을 쉴 기회를 무산시켰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뿐만 아니다. 성명서 발표 후 부산시 관계자와 면담에 참석한 '무대위' 회원들은 부산시의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에 큰 상처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에게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무대위' 성명서에는 이른바 축제·공연 스태프(Staff)로 부르는 공연·축제 기술 관련 종사자가 공연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작자라고 말한다. 축제·공연 스태프는 눈에 띄지 않게 검은 옷을 입는다. 무대 조명 밖 어둠 속이나 객석과 떨어진 조정실에 있고, 야외 공연·축제 현장에서는 관객 뒤에서 무대를 응시하는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음향, 조명 없는 공연을 상상해 보았는가. 세트를 설치하고 영상을 비추고, 필요에 따라 소품을 갖다 놓고 치우는 이들이 없다면 공연이 어떻게 되겠나. 조명으로 맥락을 만들고, 소리로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고, 세트나 영상으로 상황을 제시하는 일은 기술을 넘어 창작의 한 부분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행복, 만족, 흥분, 열정 같은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철학자 마우리치오 라자라토(Maurizio Lazzarato)는 이런 결과를 내는 노동을 '비물질노동'이라 말한다. 예술가의 노동과 축제·공연 스태프의 노동은 '비물질노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연이나 축제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기술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무대위' 성명서와 시청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는 예술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때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같이'의 가치다. 축제 하나를 취소하면 음악가, 무용가, 배우, 스태프 등 많은 사람이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예술은 관계에서 생성되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를 위한 예술, 공동체의 예술이 된다는 말이다. 축제·공연 스태프들은 성명서와 조명 퍼포먼스를 통해 '같이' 위기의 그들을 벗어나자고 말한다.

예술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조금씩 늘고 예술계도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한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 연구자 모집' 사업은 예술계가 현재 고민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바로 '예술가'의 생존 문제이다. 어떠한 미학적, 기술적 방법도 그것을 구현할 예술가의 생존이 우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언택트 시대에 예술의 적응 방법을 고민할 때 예술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예술가 기본소득'이 하나의 방법인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공동체의 기저를 넓게 떠받치는 계층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기형적으로 변한다. 공동체의 가치가 왜곡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극대화해 배제와 소외가 당연시될 것이다. 약한 곳을 위한 새로운 기준, 그것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뉴노멀'이다. 예술가 기본소득에 접근할 때도 '노멀' 보다 낮은 기준의 '뉴노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뉴노멀'은 기존 '노멀'과 같은 총위가 아니라 더 낮고 넓은 것이어야 한다. 기회와 위기를 '같이'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낮은 평균 말이다.

사회적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하는 예술가들은 이때까지 스스로 돌보기보다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연과 공동체의 숨은 문제를 끄집어내어 건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예술가가 위기의 그늘에 갇힌 채 허덕이고 있다. 이제 공동체가 예술가에게 '같이' 살아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The Art Must Go On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

이슈1 - 서승우(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이슈3 - 장수혜(공연예술프로듀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이슈2 -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조사보고서 갈무리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1991년 발표된 그룹 Queen의 'The Show Must Go On'은 리더 프레디 머큐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노래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가 남긴 이 노래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에 와 있는 문화예술계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청을 물들인 조명 퍼포먼스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공연예술업계의 위기를 알려내는 상징적 시위였습니다. 이제 다시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실행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제5호의 이슈는 'The Art Must Go On - 예술활동의 뉴노멀에 대하여'입니다.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던 국공립문화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어떤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예술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권익센터 개소 소식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영화의 전당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조사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었습니다. 예술활동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간 간과했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있으며,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대의 가치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우리 사회 뉴노멀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공립문화시설의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전망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서승우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변화와 위기를 몰고 왔다. 문화예술 분야, 특히 현장성과 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 세계 주요 공연장들이 폐쇄되고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지금, 국내 공공 공연장들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공연장을 제한적으로 열고 닫는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위기 상황에 주요 공공 공연장들의 대응 현황과 방식을 먼저 공유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뉴노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모든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잠시 멈춤'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르게 대응해 왔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공연장이 4월 19일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갔다가 4월 20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및 예매를 통해 공연장을 재개관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9일 실시된 정부의 수도권 등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다시 문을 닫았다가 7월 19일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이 시기 국공립 공연장의 폐쇄와 바로 이어진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및 강도 높은 방역(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시설 상시 소독 등)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곤란을 겪었고 힘들어했고, 심지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만 공공 공연장의 일방적인 조치는 이어졌다. 공공 공연장

을 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그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또한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에 공연장 폐쇄와 좌석 지그재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세부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1항에 의해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화시설인 공공 공연장이 너무나 쉽게 예술가와 시민을 외면하게 될 줄 알았을까? 철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공연장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온라인 공연은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코로나19와 함께 공연예술계에서 자주 듣게 된 단어가 '연택트', '비대면', '온라인', '영상화', '방구석 1열' 등이다. 공공 공연장에서도 초기에 앞 다투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직접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장도 있고, 다른 국내의 공연장 및 예술단체들의 온라인 공연 영



상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제작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 공연장에서는 과거에 진행했던 기획 공연 중 단순 기록용으로 보관된 영상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대체재가 된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콘텐츠의 퀄리티, 플랫폼의 문제, 수익 구조, 저작권, 제작비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공연영상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공연장 및 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인기 아이টে이였다. 뉴욕메트로폴리탄오페라,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라이브 영상은 전 세계 공연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006년 <마솔피리>로 론칭한 메트로폴리탄오페라의 Live in 성공요인은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오페라를 영화관에서 2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라이브로 관람한다는 것과 공연의 현장성을 결정짓는 Here & Now에서 Here는 아니지만 Now는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영국 내셔널 시어터가 NT Live를 론칭하였고 처음부터 유료 모델을 구축해 높은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연영상화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던 2013년에 예술의전당이 `SAC On Screen`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공연 아카이빙의 확장 정도로 생각했던 사업인데, 이번 코로나19 이후 각광을 받고 있다. 당초 아카이빙을 위한 현장성을 살린 라이브 상영과 이를 편집 과정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실감나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다. 공연 영상 시장은 공연 시장이 먼저 단단하게 형성된 뒤에 그 관객의 일부가 파생되는 양상이 주요하기 때문에 공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관심

은 있으나 티켓 가격이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 공연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성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 이 시기 잠시 초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때 공연의 생산자인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보완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공연장의 역할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너무나 쉽게 예술가와 시민을 외면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공공 공연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인프라이다.¹⁾ 문화향유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평등성, 접근성 그리고 문화예술, 복지, 창조 등과 같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시킬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재원을 투입해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공연장은 예술과 시민의 만남을 주선시키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며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실연을 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²⁾

우리나라의 경우 6,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지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제5공화국 국정지표에 '문화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면서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 공연장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공공 공연장 시설을 대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을 기초로 건립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공연예술이 소수의 혜택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정당하게 배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복지화', '문화의 민주화' 논의 확산에 따라 공적자원이 공

연장 설립에 투입되어 현재 전국에 255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³⁾

공공 공연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장에서 제작되고 공연되는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하나의 감정구조를 만들어 내고, 감정 구조가 모여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공공 공연장의 이러한 역할이 시대적인 틀(paradigm)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 공연장은 물리적으로 체형의 공간이다. 또한 공연예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발현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간의 복합적인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⁴⁾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공공 공연장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등장으로 공연장에 내포된 문화적, 예술적 이념과 이윤추구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장지향성과 공공우위의 분배적 성격 유지라는 상호 모순된 개념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⁵⁾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에서는 단기적인 정량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대중성과 흥행성이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지역의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공연장의 뉴노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팬데믹의 대비는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뉴노멀은 무엇일까?

첫째,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한 대면접촉이 없도록 온라인 예매와 모바일 티켓을 활용한 입장, 키오스크 등의 무인발권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발권하고 입장하는 즉 공연 관람만을 위한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또한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 생활 방역 인력⁶⁾들에 의한 방역은 물론 입장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문진표 작성, 손소독,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며 공연 관람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침묵한 채 무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

떤 시설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 공연장은 고퀄리티의 공연 영상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 스튜디오 형태로 운영하여 필요시 지역의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연의 아카이빙 기능은 물론 공연 홍보와 유통, 배급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 간 이동 제약 및 격리조치 등으로 국제 교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 공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이 부각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들을 공공 공연장에서는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를 재발견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이 지역 공연장 연대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프리젠티엄 하는 형식의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예술적 자원들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제작을 해야 하는 지역예술 생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지역의 예술가를 국내·외에 알리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 공연 영상물은 국제 교류 행사로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이병일,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 유주연, 공공공연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역할과 관련 정책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3) 201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12월
- 4) 조은아, 2015 국내공연장 브랜드 가치 창출과 프로그래밍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
- 5) 유주연, 공공공연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역할과 관련 정책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6)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발열 체크, 소독, 청소, 방역물품 전달,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 업무를 하는 인력

예술 활동의 위기와 예술인 권익센터

차재근 문화예술소통단체 숨 대표

“예술은 사회의 악을 걸러 주는 걸음망이다.”

예술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어려운 이를 위한 목소리, 부조리함에 대항하는 몸부림 등, 예술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술가들이 지금은 곤경에 빠져 있다.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가, 미술인, 연습실을 운영하는 무용인, 연극인 등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작업실 임대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예술인의 수입은 전시나 공연, 축제,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초청이나 판매, 교육을 할 때 발생하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닌 경제적인 수입 또한 전무한 상태로 모든 활동을 접고 경제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은둔 생활을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개인 예술 활동 수입 평균 1,281만 원, 개인수입 1,200만 원 미만인 예술인들이 72.7%라고 발표했다.

위 내용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록을 통해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가 보장 제도에서 사회복지, 주거, 교육, 의료, 긴급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예술가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사회 정보에 밝지 않은 예술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나 지자체, 주변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는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을 다른 일에서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어려운 실정이 되니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분야인 노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 분야에는 분야별 권익, 인권센터 등이 있어 사회생활 또는 직장, 가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기관 또는 민간 기관들이 오랜 기간 존재해왔는데 유독 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만한 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집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부딪치게 된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지난 6월 22일 부산예술인권익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공공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행정 연구회 사회복지사,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 부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인 권익센터는 예술가들이 힘들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으로 예술인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가 만들어 지고 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그 중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처음에서 황당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동안 예술가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쩌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예술은 항상 예술만의 언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예술인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웅색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아픈 것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예술인들도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 할 때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문화예술계 연대의 모습들

장수혜 공연예술프로듀서

2020년 7월 17일, 전국 50여 곳의 밤하늘에 다섯 개의 빛줄기가 비쳤다. 소셜미디어에는 #봉화를올려라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조명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날, 전국 500여 개의 공연기술 업체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줄줄이 취소되는 공연예술행사와 공연예술 스태프들에 대한 안전 메뉴얼이 확보되지 않은 업계의 상황에 대해 호소를 보내고자 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피우는 봉화를 상징하며 마치 누군가에게 SOS 신호를 보내는 듯한 빛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힘을 내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함께 하자.’

갑자기 전 세계는 세계화에서 고립의 상태로 변했다. 포옹과 키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물리적 접촉에서 비대면으로, 극장과 국경은 닫혔고 위기의 상황 속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 예술가, 계약직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는 알려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마치 공연기술업 종사자들이 하늘에 빛을 비추었듯이 누군가는 나서야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지지하는 타인과의 연대가 생성되어야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는 회복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연대의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또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시도가 이루어져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변화와 회복을 위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연대를 복돋는 유럽 기관들의 주도



유러피안문화재단
Culture of Solidarity Fund 웹사이트

기관의 적극성과 민첩성, 민간단체의 강하고 논리적인 의견 전달, 전문 인력양성, 유연하고 지속적인 지원 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까? 물론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다. 다만, 지금의 긴급상황에서는 ‘어떻게’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파된 지난 4월, 유럽의 각 기관들은 재빨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공유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기관들에게는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지 재빠르게 알아차리는 역량이 요구되었다. 각국의 긴급 지원대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다양한 공모성 기금프로그램들이 추가로 마련된 가운데, 유럽의 주요기관에서는 ‘예

술계의 연대’에 집중했다. 유러피안 문화 재단(European Cultural Foundation)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연대의 문화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기 위한 공모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했다.¹⁾ 1차 공모에서 젠더, 인종차별, 이민자, 거리예술 등을 주제로 한 권역별 29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현재 2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 젊은 축제 인력 개발을 위한 페스티벌 아카데미(the Festival Academy)에서는 연대를 위한 페스티벌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각종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²⁾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을 장려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ResilliArt (레질리아트)운동을 시행했는데, 예술의 복원력을 긍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상 토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예술정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예술포럼’ 역시 유네스코의 레질리아트와 연계한 온라인 포럼이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예술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가깝게 우리를 모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대중음악, 시각예술, 필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평화와 회복의 운동을 유도하고 유명인들과 음악인들이 참여한 #TogetherAtHome (함께 집에서)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했다.³⁾

뭉쳐야 살고, 정보는 힘이다

정부 및 비정부기관들의 다양한 캠페인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여파에 폐쇄되는 극장들과 문화예술계의 예산삭감에 민간단체와 예술계의 리더들이 연대를 이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현대 공연예술 네트워크(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은 문화예술기관 및 연합들과 함께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국에 문화예술계를 위한 강경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가와 예술종사자들에게 실업 수당과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권을



IETM 성명문 표지

주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그들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유럽연합 코로나19 대응 투자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한다. ▲문화부와 예술 위원회의 기존 예산 외에, 문화 분야를 위한 긴급 자금과 어려운 자금을 조성한다. ▲수혜자가 활동을 연기할지, 취소할지, 전환할지,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주기를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기존 자금 조달 계획에 유연성을 적용한다.▲2020년 이후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문화와 예술의 부활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 교류 예산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예술가들의 직업, 관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사회적, 재정적 인식, 개인적 행복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성격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시작한다. ▲미래의 위기와 강제 노동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본 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하라. ▲문화와 예술을 경제적, 사회적 재생과 미래 전환 전략에 통합하여 시민의 복지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량을 인정한다.

IETM은 또한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현재 피해 상황을 알리고 각 문화예술단체와 개인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왔다. 이 외에도 유럽 각국의 정부 단체와 유럽연합을 향해 장르별, 기관특성별 예술 네트워크와 연합들이 작성한 성명서와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며 문화예술계 주요인물들과 리더들의 적극적인 서명과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예술가들의 연대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크리에이팅 뉴 퓨처스(Creating New Futures, 비공개그룹)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예술가들의 네트워크이자 연대 모임으로 축제 기관, 문화예술기관들의 권력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요구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몇 주간의 정보 수집과 토론을 통해 공연 예술 단체를 초청하는 축제와 예술기관을 위한 윤리와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권력체계를 지적하며 예술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트너로서 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공연예술의 디지털화와 갑작스런 취소 및 연기 요청에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화하고 어떻게 계약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가이드를 제시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문화예술기관들에 따끔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도 개발 중이며 그 작업과정이 공개되고 배포되고 있다.

- 1) 유러피안문화재단, 연대의 문화 펀딩프로그램 <https://www.culturalfoundation.eu/culture-of-solidarity>
- 2) 페스티벌 아카데미, 연대를 위한 축제들 <https://www.thefestivalacademy.eu/en/covid-19/>
- 3) 유네스코, 레질리아트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콜 아웃,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예술기관에 던지는 시민들의 함성

코로나19와 함께 환경오염, 인종차별 등 시민들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드러나며 사회적 긴장감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6월 11일, 비무장한 46세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전 지역은 울분을 터트렸다. 그런데 수많은 시위와 청원과 동시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문화예술기관들의 침묵이었다. 미국 예술기관들은 공정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인종차별은 변화하지 못했고, 백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계와 권력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뒤흔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고, 시민들과 예술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을 외치는 예술기관들을 비난하고 불매하는 'Call Out(콜 아웃)'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기업의 사회봉사를 연결하는 SESC(Social Service of Commerce)라는 단체가 민간예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극빈층을 위한 식량 기부와 건강과 위생교육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기부할 음식을 가져오면 공연티켓을 할인해주며 유명인, 극장과의 연계로 빈곤층을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SESC의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극장과 예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가치실현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존재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에도 가치의 변화가 생겼으며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브랜드로서 리더십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성숙한 연대의식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발코니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영상통화 앱을 통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잘못된 시스템에 용기있게 도전하는 연대를 통해 우리는 변화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 4) 세계보건기구 #TogetherAtHome <https://www.who.int/campaigns/connecting-the-world-to-combat-coronavirus/together-at-home>
- 5)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Rescue the Arts : Plea to National Governments <https://www.ietm.org/en/rescue-the-arts-plea-to-national-governments>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시작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상적 규칙으로 고착화될 조짐이 보인다. 종식의 시점도 불투명하고, 문화예술활동 중단의 여파가 공연예술업계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의 변화와 재개가 필요하다.

부산문화재단은 영화의 전당과 공동으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활동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와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시민 1,100여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이 조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총 1,106명이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527명, 일반 시민 579명이었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코로나 사태 이전 문화예술 활동 패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변화 유무, 부산 문화예술계의 어려움과 필요과제,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문화예술활동의 변화 예상 등을 묻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문화시설 방문, 이용 빈도가 감소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계의 큰 어려움으로 부산 시민은 '외부 문화활동 참여 자제분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수입 감소로 문화예술 관련업체 경영난의 가중'을 꼽았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경제적 수입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과 관객모객의 어려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술활동만으로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려움'을 꼽았다.

온라인 관람문화의 경우 응답자의 63%가 온라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관람문화에 긍정 응답 이유로 '안전에 대한 우려, 새로운 온라인 매체 등장, 비대면 분위기 확산' 등을 들었다. 온라인 관람문화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예술의 대체 불가능한 현상성, 온라인공연의 수익창출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되었다.

현 상황에서 부산 문화예술계가 시급히 추진할 사안으로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과 '관람료 할인 등 시민참여 확대 지원' 응답이 높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부산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온라인콘텐츠 개발, 예술인생계지원, 예술활동재개'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소규모 예술활동 활성화, 야외프로그램' 등 대규모 실내공연행사보다는 근거리의 소규모 문화행사, 야외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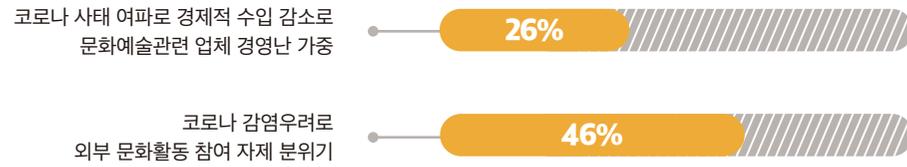
문화예술의 새로운 회복력을 만들어가야 할 때

그간 사회적 위기가 등장할 때마다 문화예술활동은 중단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회복되어야 할 일상의 모습에 문화예술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질 수 없는 보편적 일상이 문화예술 활동이며, 이를 위한 예술인 생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월 8일자 정례브리핑에서 활동종류별 감염위험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 '관람'은 낮은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되었는데, 문화예술활동이 안전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유지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서적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문화예술활동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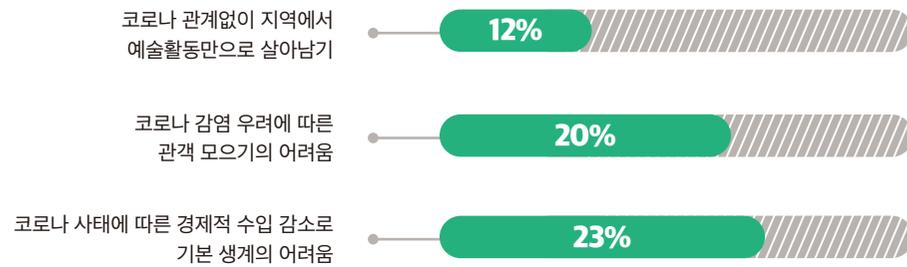
이번 코로나 위기는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술활동의 본질 중 하나인 현장성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오프라인 예술활동을 즐길 방법을 고민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위기에서 새로운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계 안전 수칙 마련,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활동 개발 지원, 생활권 근접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등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 부산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어려움(주요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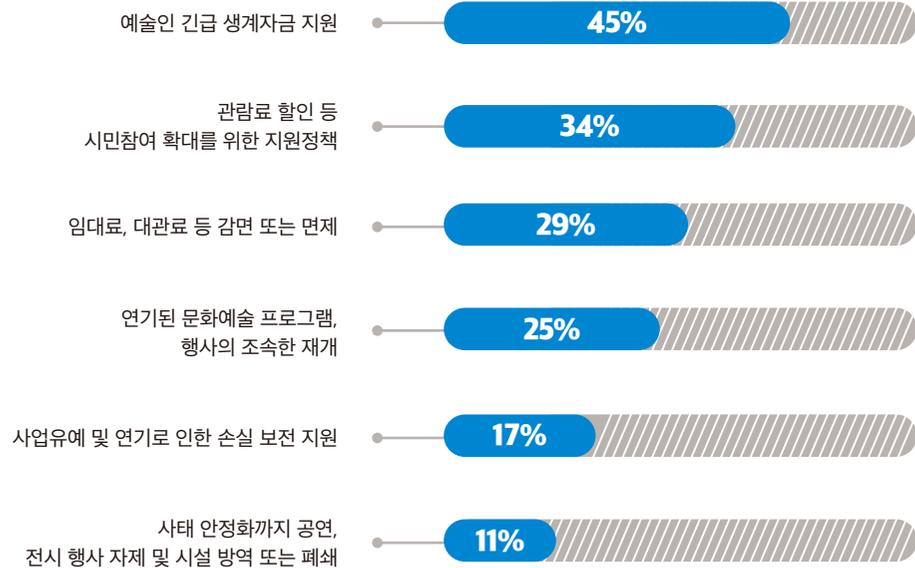
· 부산문화예술계 어려움 - 부산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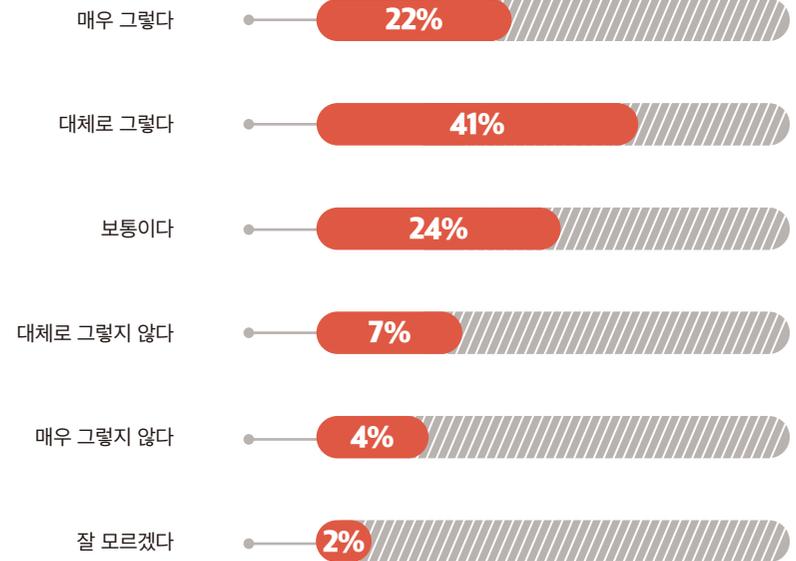
· 부산문화예술계 어려움 - 문화예술계 종사자



○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온라인 관람문화가 확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부산 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워드 클라우드)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종합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부산시민



문화예술계 대응방안 - 문화예술계종사자



그냥 내게도 예술이었다.

우정아 한국장애인복합문화센터장

내가 예술을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는 것은 본능이었다. 나의 본능! 본능을 무엇이라고 정의해내는 것이 오히려 사족처럼 여겨진다.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며 내 마음 안과 밖을 차지하며 나온 것이다. 20년 넘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실천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내가 하는 일을 위한 설계의 시간이 아니었나 회고해본다. 그 순간도 내가 원하고 만들어간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런 내게 발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예술 경험들은 단호하게 내 삶을 바꾸어 버렸다.(사실 단호하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사회복지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내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막연하기만 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천천히. 예술가들의 에너지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각각의 색깔이 너무 달랐고, 그 에너지에 대한 경험은 내 에너지의 총량이 부족할 정도로 강하게 점철되었다. 이렇게 나의 인생 2막은 시작되었다. 자유, 생경, 신기함, 도전, 격정, 조화, 감동, 새로움, 불안, 두려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왔다. 시행착오투성이인 나의 연결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예술,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 예술인 등등으로.

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의 힘

내가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 혹은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나도 사실 잘 모른다. 어떻게 사람과의 만남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알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 바른 태도로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예술의 힘은 그렇게 묻지 않아도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기도, 위로받게도 한다. 자연스럽게 연결이라는 지점이 생긴다. 예술은 장애 유무를 떠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작품을 보며 감동의 지점을 나누고, 예술이 본인의 삶에서 의미하는 부분을 여러 표현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예술 중매쟁이를 자처하며 예술인과 장애예술인들을 만나러 다니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오지랖을 맘껏 발휘한다. 이미 사회복지현장에서 쌓아온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오지랖을 익숙하게 발휘해본다. 그러나 생각보다 연결의 지점을 찾는 것은 괴발개발하듯 행보가 어려웠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장르를 이해하고 느끼기에 아직 난 하수임에 틀림없고, 시간 투자 총량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본능처럼 머릿속 설계도에 따라 어설피게 공작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장애인예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요즘 아주 재미있는 작업을 한다. 부산에서 장애인 예술, 장애예술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장애예술인들, 장애인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토크 콘서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1회차와 2회차 이슈메이커로 초대된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와 농인 아티스트의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인 '니 얼굴 그려주는' 정은혜 작가에게 누군가 물었다.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정은혜 작가는 "왜 싫어요? 나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은혜 작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삶의 고난과 존재의 미미함을 겪으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인 만화가 장차현실 씨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6년 전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그리기 시작한 '니 얼굴'은 벌써 2,7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은혜 작가에게 예술은 생존이자 존엄이고 치유였음을, 그리고 모두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두 사람은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술은 장애의 경계를 허문다. 정은혜 작가는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몇 번이나 필자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이 시간이 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은혜 작가와의 감정이 나와 교차함으로써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정말 본능에 충실한 정은혜 작가의 고백이었다.

두 번째 이슈메이커인 농인아티스트 김지연 씨는 만나기 전부터 생경한 경험에 진행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기차에서 내리고 있는 지연 아티스트의 환한 웃음을 시작으로 수어통역사의 통역이 무색할 정도로 참 잘 어울리는 사이라는 것을 이내 알았다. 그는 80-90세가 되어도 춤을 추는 댄서이고 싶다고 했다. 수어통역사 두 명을 배치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한 초조함으로 시작된 토크 콘서트는 시간의 문을 훌쩍 넘은 듯 몰입하여 아티스트의 삶에 다가 갔었다. 김지연 아티스트의 예술에 대한 열정, 춤에 대한 간절함, 농인에 대한 편견의 안타까움, 농인 예술에 대한 본인 역할의 진정성 있는 결의가 참여한 사람들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의 표정은 흥분돼 있었다. 누구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농인에 대해 몰랐음에 대한 고백과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암묵적 결의가 촉촉이 내려앉았다.

모두에게 더함도 덜함도 없는 같은 선상의 예술이기를

예술의 가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어느 곳에선지, 예술 본능이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나는 연결과 콜라베이션이 있었으면 한다. 그냥 내게도 일상의 예술인 것은 그도 당신도 누구에게도 더함도 덜함도 없는 같은 선상의 예술이기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 예술 지원법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지만, 나의 바램은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구분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작은 연결이 일상에서 시냇물처럼 흘러흘러 높은 파고의 멋진 바다로의 향연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예술토크콘서트 '예술본능 토크 살롱'



장애인 예술토크콘서트 '예술본능 토크 살롱'

2020

제6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 - 시민 문화권에 대하여

Editor's Letter

- 칼럼 <부산시민 문화현장>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야
- 문화정책이슈 1 문화자치와 주민참여예산
- 문화정책이슈 2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문화도시의 미래 문화도시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 문화정책이슈 3 도시를 진단하는 새로운 시선 - 문화영향평가
- 예술 + 재생 완월동은 어떻게 문화예술과 만나는가?
- 연구보고서 갈무리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기획도서
-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EDITOR'S LETTER

칼럼 - 남송우(<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 추진위원장) p.96

[<부산시민 문화현장>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야]

“<부산시민 문화현장>의 가치와 정신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성력과 조직력을 가져야 한다.”

이슈1 -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p.98

[문화자치와 주민참여예산]

“문화자치의 핵심은 ‘거버넌스’(협치)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점은 민관거버넌스의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이자 도구이다.”

이슈2 - 이영준(김해 문화도시센터장) p.101

[문화도시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은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며 ‘문화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슈3 - 윤지영(부산연구원 연구위원) p.105

[문화도시를 진단하는 새로운 시선: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예술+재생 - 변정희(여성인권센터 ‘살림’ 상임대표) p.109

[완월동은 어떻게 문화예술과 만나는가?]

“문화예술을 통한 완월동과 부산 시민의 예측 불가능한 만남은 새로운 미래의 가치로 연결 짓는 부단한 회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연구보고서 갈무리 - 오재환(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p.111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기획도서]

“코로나 19가 미친 사회적 충격을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지자체 최초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부산시민 문화헌장>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야

남송우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 추진위원장

국내에서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마련했다. 이 문화헌장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시민이 문화권리 향유의 주체이며, 이 문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나가기 위해서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구현해나가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국민주권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서 강조되어왔다. 특히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만 국민주권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 주권에 대한 인식은 취약한 편이었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문화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온전한 행복을 향유하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 주권의 온전한 향유는 정치적·경제적인 주권의 행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다년간 국제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의 범주는 법률적 내용이나 구체적 실행에서 가장 덜 논의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논의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문화적 권리의 문제는 다른 권리, 특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비해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문화적 권리는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사회적 권리 신장에 묻혀 버렸다. 또한 문화의 특성상 문화적 권리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사회적 쟁점이 되려면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적 명료성을 지녀야 하는데 문화적 권리는 그런 명료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유네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선언 5조에는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띤다. 창조적 다양성이 활성화되려면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3조와 제15조에 명문화된 문화적 권리가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연유로 국내에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실현에만 집중되었던 논의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각 지자체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시민 문화주권을 실현시킬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단순한 공표로 그치지 않고 긴 생명력을 가지려면, 공표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즉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공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공표 이후의 문제이다. 즉 공표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표 이후에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문화기관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지향하는 바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추진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바로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부산시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산시민 모두가 정말 문화주권을 제대로 향유하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힘을 합쳐야 한다. 우선은 부산의 문화예술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 연대는 부산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문화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연속되면서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나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문화예술 단체 나아가 학교기관들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체는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 실현을 위한 시민 연대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성력과 조직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실천 주체의 탄생만이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의 결성만으로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는 가치와 정신의 실현을 위한 구심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구심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된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문화적 권리목표가 문화헌장에 실

려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문화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체험이 없는 문화적 인식은 공허할 뿐이다. 이는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마음에 다가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권이 천부적이긴 하나 인간이 적극적으로 그 인권을 인식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다. 부산 시민의 문화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하나의 문건으로 존재한다면, 문화헌장은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 그러므로 앞서 논의된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을 체화시켜나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연대의 결성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 연대가 추진해야 할 일들은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산시와 시민 사이에 필요한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매개함으로써,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지향하는바를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촉매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산시가 책무로 제시한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 책무가 된다. 부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더 많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단순히 공표로 끝나는 한 장의 문건으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 문화의 진정한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문화자치와 주민참여예산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지역문화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한다면 전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지역문화의 현실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에 급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누누이 지적되었던 문제였지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현실 앞에서 사실상 무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정책과 사업, 예산 등에 있어서 민간의 시민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의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지역문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연장과 전시장 등 시설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축제와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나아가 도시재생에 대한 문화적 개입, 청년문화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는 말 그대로 생태계라는 말에 어울리는 전방위적인 확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공간을 넘어 새롭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실험적인 복합문화공간이 지역문화 생태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20세기 초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온 대도시의 발달과 쇠락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도시 재편 혹은 재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중소도시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은 도시문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달라진 문화적 욕구 또한 자



곰자람미술관

신들이 생활하는 지역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소비 공간에서 먼저 감지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공공 공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공간 환경의 변화는 공간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자치'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정부는 문화재단에 공공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이 모여 문화사업과 문화공간 운영을 맡는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 더욱이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은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공공문화시설 또한 기존 지방정부가 운영할 때



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자율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율적인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다.

그런데 '문화자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문화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일텐데, 설립과 운영의 부분이다.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과정으로 시설이나 공간이 설립되고, 운영은 그 다음에 고민하는 수순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혹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

성북문화재단(서울시 성북구)에서 2018년을 전후로 주민참여예산의 특징을 활용하여 공공 공간을 새롭게 변모시킨 사례는 의미가 있다. 2002년 설립된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공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극장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과정

을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관심과 필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성북정보도서관은 성북문화재단 운영 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노후뿐만 아니라 위치가 '천장산'이라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열람실과 같은 도서관 공간은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지만,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목적홀(강당)은 다른 공간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은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다목적홀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성북문화재단은 창립 초기부터 지역예술가들과 탄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오면서 그들의 활동공간 및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던 때였다. 그 중 공연예술인들의 필요와 의지가 부합되어 이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도서관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예술인들이 공간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성북정보도서관 사서 및 지역문화팀 담당자들이 거점공간으로의 변모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 상태라면 지역의 문화공간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지방정부 재정은 한정적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자의 적극성과 사업의 필요성이 잘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 다목적홀은 '천장산우회극장'이라는 이

름의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2019년 3월 공공극장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체들을 적극 결합시켜서 지역 공연예술인(단체), 도서관 사서, 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 설계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후 극장 운영과 기획 등 관련해서 공동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실제로 참여예술인들과 재단이 공동운영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극장 운영 방식은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지역 공공극장의 새로운 실험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서관 5층의 개인연구실 공간 역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배경이 담여 있다. 하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의 도서관 공간의 변화라는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북정보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문화취약지구에 해당되어 '미술관'과 같은 전시공간이 생긴다면 지역주민이나 아동청소년,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좋은 기회와 자극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이 사업 역시 선정되어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8월 개관했으며, 기획전시를 비롯한 미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주민들



극장

을 만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예술가 커뮤니티와 재단 직원들 사이에 상호 논의와 협력하는 과정은 지난했으며, 미술관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전 개인연구실 이용자 일부가 강한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올 정도로 난관이 많았다. 그럼에도 지역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문화자치의 '공간'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문화자치의 핵심은 '거버넌스'(협치)이다. 단순한 공간 조성이나 운영을 넘어 그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 민간과 공공이, 행정과 자율(창조)이 만날 수 있다면, 문화자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점은 민관거버넌스의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이자 도구이다. 지역문화생태계는 몇 가지 특정 요소로 이뤄지지 않으며, 물질적 조건과 환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까지 화학적 결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극장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문화도시의 미래 문화도시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이영준 김해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의 정책적 의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당연히 지역이라는 '분권'과 시민 중심의 사업설계라는 '상향식 정책구조'가 담겨 있다. 과거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은 '유럽의 문화수도' 정책을 수용해왔다. 영화의 도시 부산, 역사문화의 도시 경주, 전통문화도시 전주, 백제문화도시 공주·부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등 엄청난 예산을 하드웨어에 집중하면서 '특성화'했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사업이 우선되어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다. 현재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020년 제3차 예비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에서 40여 개의 도시가 응모할 정도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설계된 문화도시의 정책적 의미는 첫째 '지역 특성화', 둘째 '상향식 사업설계', 셋째 '도시경영의 원리로서의 문화', 넷째 '시민 문화권과 시민력'의 강조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특성화와 상향식 사업설계는 시행령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이제까지 한국의 문화정책 중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유일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도시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은 도시경영의 원리가 산업이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온 관성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 관점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화도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개별사업의 참신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도시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협치의 구조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모든 문화정책사업은 전문가의 영역이거나 행정의 의지였다.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플러스로서의 시민’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야만 ‘문화권과 시민력’도 실현 가능해진다. 아직도 헌법에 규정되지 못한 권리로서의 문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그래서 관객이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만드는 일이 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다.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 - 문화도시 김해의 사례

김해와 문화도시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설계되었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응모하였고 2017년 선정된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기가 나지 않아 본의 아니게 1년을 더 준비했다. 2018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예비도시에 신청하였고, 지정되었다. 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는 10개 도시. 하지만 2019년에 7개 도시가 선정(부천, 천안, 청주, 원주, 포항, 서귀포, 부산 영도구) 되고 3개 도시는 탈락(김해, 남원, 대구)의 고배를 마셨다. 현재 김해는 12개 도시와 함께 2차 예비도시로 12월 말 문화도시지정을 앞두고 있다.

김해문화도시사업 중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해는 2019년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했다. 지정탈락 이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만드는 방법론이었다. 사실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예비도시는 없다. 김해 역시 수없이 많은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왔고 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이를 ‘구조화’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새롭게 설계된 사업이 ‘문화도시 협의체’와 ‘도시문화 실험실’이다. 문화도시협의체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 테이블을 하나의 형식으로 구조화했다고 보면 된다. 김해의 문화도시협의체는 행정,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이라는 3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

① 행정협의체

문화도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앞서 서술했듯이 ‘문화’라는 관점으로 도시를 ‘경영’하는 일이다. 그래서 문화도시협의체는 도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먼저 행정과의 논의 테이블은 문화예술과 등 관련 있는 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비롯해 김해시 전 부서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화예술분과(문화예술과, 관광과, 가야사 복권과), 행정분과(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도시분과(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휴먼웨어분과(인재육성사업소, 일자리경제국), 복지 및 환경분과(시민복지국, 환경국)으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문화도시와 연계 할 수 있는 일종의 과제들을 만들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행정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문화도시사업은 더욱더 폭넓은 영역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책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인 사업을 공문화함으로써 공동의 지향점을 발견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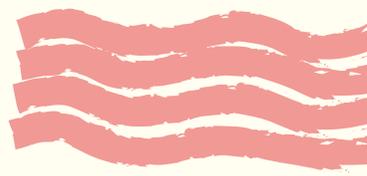
② 유관기관 및 단체 협의체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김해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주체, 예총, 민예총, 문화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복지재단,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문화도시와 연관된 기관들과의 논의 구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고유의 업무 역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 예술단체인 예총·민예총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협의해야 하고, 문화원과 함께 해야 할 사업도 많다. 특히 김해는 문화도시 분야 중 역사전통 분야에 신청했다. 그런 면에서 문화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특히 문화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재생과는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구축한 동상동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와 무계웰컴레지던시를 김해 문화도시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③ 시민협의체 - 도시문화실험실

도시문화실험실은 2020년 김해문화도시 예비사업의 꽃이다. 시민협의체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접목한 구조다. 김해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2년 동안 ‘말하는 김해 듣는 김해’, ‘권역별 포럼’,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100인 토론회’ 등 시민을 만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말하는 시민’은 만들어졌지만 ‘행동하는 시민’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느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도시문화실험실’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해는 기초지자체지만 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큰 도시다. 그래서 김해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1개의 도시문화실험실을 만들었다. 실험실별로 책임연구원 3명, 시민연구원 10명이 활동하는 구조다. 수다실험실을 통해 끊임없이 의제를 토론하고 지역 리서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문화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민과 함께 기획한다. 이 문화적 실험에 대한 실행 여부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였다. 의제설정과 사업기획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고, 예산과 집행의 모든 권한을 도시문화실험실로 넘겼다.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성공적인 시도라 생각하고 있다. 시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도시문화실험실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의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도시문화실험실이 마을마다 활동하는 시민조직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다.



문화도시를 진단하는 새로운 시선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윤지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해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



김해 도시문화실험실

문화민주화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국민적 향유확대라고 하는 '문화민주화'의 개념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정책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문화를 문화예술이라는 좁은 범주로 인식하게 했고, 수없이 많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어도 이를 향유하는 계층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민주화' 정책은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그 이후 문화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공연장과 미술관이 지어졌다. 하지만 전국 251개 문예회관 419개 공연장의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총관객 수는 9,513,409명(평균 22,705.0명)이다. 그중 유료 관객 수는 3,151,415명(평균 7,521.3명)으로 조사되었다. 1년에 국민의 6.1%가 돈을 내고 공연을 본 셈이다. 전국 지자체 226개보다 많은 251개의 문예회관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지만, 이 수치는 '문화민주화' 정책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반면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었고,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에서 구체화하였다.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은 '문화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문화민주화가 향유의 주체, 관객으로서의 시민이라면 문화민주주의에서는 '문화권'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이론가 이동연은 '문화권'을 '환경, 생태와 더불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되는 독자적인 권리'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을 넘어 문화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흐름은 동시대 문화정책의 가장 의미 있는 전환(Paradigm shift)의 가치를 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문화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그사이 어디쯤 '문화도시'라는 정책적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 1) 2018년 공연예술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19.
- 2)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 01. 28.
- 3) 이동연(2013),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한국문화연구학회, 문화 연구 제2-1호, p. 128.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마침내 문화영향평가가 법정화 되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문화적 손실이 이어지고, 개발 위주 사업으로 문화적 가치 상실 또는 공동체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에 의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설계되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 2015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문화영향평가 대상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문화영향평가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정의	국가나 지자체가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2. 목적과 목표	문화기본권 방지, 문화적 권리의 확대, 문화정체성의 훼손 방지,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 실현, 문화적 요소로 정책 효과성 제고
3. 법적 근거	「문화기본법」 제 5 조 제 4 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화영향평가의 의미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한 대안 모색,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와 확산
5. 평가 대상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경우

<표 1>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 특성화 지표는 평가수행기관이 평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자료 : 2020년 문화영향평가 지표 및 추진일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하지만, 여느 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영향평가 역시 정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다양하고 많은 평가 시행 사례들을 통해 가장 적합한 평가지표로 문화영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사업을 공통적인 평가기준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지표 항목들로 구성하다보니, 지역 특성 반영의 미약한 점과 평가결과 의견의 구체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국에는 있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역문화 고유의 특징들이 산재되어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발생하였다. 전국의 평가사례들을 상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 지표항목으로 구성해야 했기에 각각의 지역으로 발현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보편성과 형평성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문화영향평가지표에는 지역특성화지표를 평가수행기관이 평가 대상

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짧은 평가기간 동안에 평가대상마다 각기 다른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문화영향평가의 지속성과 평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평가대상만을 위한 지역특성화지표개발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가 요구되었다. 시범평가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평가 결과 작성은 컨설팅 기반의 서술식 평가의견서 작성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와 컨설턴트식 해석과 기준의 모호성 등의 이유로 문화영향평가의 효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발생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이 낮고,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법정평가로서의 위상이 약하고, '권고형의 규범적 평가'로 되어있어 평가결과 정책반영의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지속적인 컨설턴트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현재 조례상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결여되어 일회성 평가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시 문화영향평가 제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와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부산광역시 시민 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중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4장 문화영향평가 제11조에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보존·확산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시의 계획 및 정책(사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문화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지표 및 시행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산 실정에 맞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모델 개발과 시범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요점사항으로, 부산시 문화영향평가 역시 본 평가에 앞서, 시범평가를 시행하는 기간을 3년 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범평가 대상은 계획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사후 단계 별로 각각 1개씩 평가 대상 사업을 매년 선별하여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시범평가기간 종료 후, 본 평가를 시행하기 전 3년 간의 평가결과 및 평가사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 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유형 및 방법, 평가지표 등 재점검 단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 문화영향평가제도도 일부 개정이 예상된다.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고 부산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개정되기까지 행정적 절차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1년에 시행될 시범평가는 현 제도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은 현재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산형 지역특성화지표를 개발하였고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수행하였다.

첫째, 중앙에서 평가하는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 절차를 준거하되, 지역특성화 지표 개발에 기존 문화영향평가지표의 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둘째, 부산의 문화활동, 문화인프라, 문화콘텐츠, 문화자원으로 부터 발현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가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문화영향평가가 컨설턴트로 진행되어 온 평가결과 활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상태 범위를 척도로 제시한다. 긍정적 영향은 대상지에서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 생산과 이를 향상시키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특성화 지표 평가에서는 컨설턴트 방식으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반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문화 영향을 사전에 제거, 예방, 완화할 수 있는 계량 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적 영향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평가시기는 계획 및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수립 단계 사업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사업이 종료 된 시점과 사후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한 심도있는 평가 업무를 요하는 사업 대상은 사후 및 모니터링 단계를 두고 사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사후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사업의

사전 상태와 사후 상태를 분석하여 사업으로 인해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한다. 사후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업으로 인해 문화적 가치의 긍정적 영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평가의 실효성 가능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3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 사업 중에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사업)

②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의 89개 세부과제 중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

③ 이 중 문화적 가치 확산 및 부산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러한 배경 하에 개발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의 지표항목들은 도시화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정책 제언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뉴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부산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도래했다. 부산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전반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020년 10월 부산시민 문화헌장 선포를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시민 문화권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 문화영향평가 제도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적인 긍정적 문화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B 구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DB 구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영향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장시간을 요하는 특징이 있기에 DB구축은 매우 중요한 조건사항으로 부산시 조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문화영향평가 전 과정과 사후 모니터링 및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유사 사업별 자료를 구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셋째, 부산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빠른 정착과 이해도 제고, 바람직한 문화권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문화적인 관점을 사업에 투여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완월동은 어떻게 문화예술과 만나는가?

변정희 여성인권센터 '살림' 상임대표

완월동, 혹은 성매매 집결지라는 트라우마

부산 최초의 신작로라고 알려진 천마로를 따라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는 버스를 탈 때면 저 멀리 깜박거리는 바다와 영도의 불빛이 아름답다. 그 풍경의 반대편으로 붉은 불빛이 골목길마다 새어나오는 동네가 있다. '완월동', 지금은 사라진 행정지명이지만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불리는 동네다. 부산의 지난 100년간의 지도를 겹쳐보아도 거리의 구획과 그 용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동네가 바로 완월동이다. 이런 완월동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한반도 최초의 유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강제적으로 시행된 공창지역이라는 것도, 한국 전쟁 당시 위안소로 쓰였다는 사실도, 한때 '동양 최대의 사창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다.

완월동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역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아픈 역사, 일종의 외상(trauma)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비극과 착취와 폭력이 존재했지만 2000년,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치 외상에 대한 반응과도 같이 그 현장의 실체나 진실을 망각하고 회피 또는 부정하거나 체념해왔다.

완월동, 누구의 언어로 어떤 변화를 말할 것인가

'회복'이 외상에 의해 무너지고 부서진 기억들을 재건하는 과정이듯, 성매매 집결지 역시 변화와 회복이 필요했다.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와 재정비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완월동 지역도 변화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12월 부산시는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완월동'을 포

함한 서구 총무, 초장, 남부민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서구청은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 공모에 나섰다. 같은 해 7월 부산완월동폐쇄및공익개발추진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발족하기도 했다. 2020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완월동 '골목재생리빙랩'과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완월동의 변화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반가우면서도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필자가 속한 단체인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은 2002년부터 완월동 이웃에 자리 잡은 NGO 단체로, 성착취 현장의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며 무엇보다 완월동이라는 장소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행정과 시민사회와 완월동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왔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어왔다. 마을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을의 주체가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민들임을 안다. 그런데 완월동의 변화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아무런 자원 없이 고립된 여성들? 착취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포주들? 그곳을 드나드는 구매자들? 혹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착취와 폭력의 공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재생할 것인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었지만, 그곳의 진실을 설명할 언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살림'은 수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하며 길을 찾아나갔다. 예술가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그 과정 속에서 완월동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 짓는 역할을 했다.

문화예술, 완월동을 만나다 - '언니야 놀자'에서 '완생' 프로젝트까지

문화예술이 완월동을 만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는 2005년에 기획, 추진되었다 무산된 <완월동 문화열기 프로젝트 - 언니야 놀자>일 것이다. 완월동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언니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면 좋겠다는 '살림' 활동가의 소박한 바람이 완월동 안에서의 문화축제 기획으로 바뀌었고, '재미난복수'와 공동기획으로 100명 가까이 되는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의 방해와 폭력적 진압으로 행사가 아예 무산되고 말았다. 예술가들은 완월동을 둘러싼 행정과 치안의 무력감과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을 느꼈고, 각자의 방식으로 완월동과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남포동의 피프 광장에서 열린 문화축제 Q&A는 살림과 문화예술가들이 만나 만들어낸 다른 질문과 답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살림'에서는 완월동을 다시 생각하는 '완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완생'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네트워크를 통해 결집시키고 예술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완월동을 각자의 방식으로 증언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주요 기획으로 삼았다. 전업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네트워크들은 완월동이라는 장소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일부를 잠깐 소개한다. 노래 짓고부르는 이내씨는 '이야기 수집가'로서 매주 한 번씩 완월동을 산책하며 주간 <불현듯>을 발간하였고, 현재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에서 활동하는 송진희 작가는 <완월동 편지>라는 기획을 통해 완월동이라는 장소에 대해 편지를 쓰고, 그 응답을 주고받았다. 소설가인 김비 작가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여성들이 부산에서 추억을 공유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다는 데서 착안하여 부산의 장소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 에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기묘나 작가와 장은수 작가는 반려동물과 여성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연대를 발견한 <기대고 또 기대고>

라는 작품을 만들었으며 일상드로잉작가 박조건형씨는 <친구랑 완월동을 산책하다>라는 주제로 성매매 집결지 드로잉 작업을 해나갔다.³⁾ 이들 작가의 작품은 2015년 완생 종합전시회 <완월동, 기록하다>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예술과 재생, '예측 불가능한 만남'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능성

전국의 각 지역들 역시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 등의 변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풀어왔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리본(re-born) 프로젝트>와 같은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시를 기획하며 전주 선미촌 성매매 집결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의 서사를 만들어나갔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앞두고 <자갈마당 시각예술 아카이브>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의 참여로 자갈마당이라는 장소의 아카이빙 작업을 시도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기획 전시 <다시 보다>를 통해 문화예술의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사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착취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송진희 작가는 <완월동 편지>의 서두에 '편지란 예측 불가능한 만남'이라고 적었다. '예측 불가능한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것들과 다시 새롭게 연결되는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은 완월동이라는 현장과 부산 시민이 예측불가능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 만남은 성매매 집결지를 어둠과 망각의 역사로부터 끌어내 정의, 희망, 여성인권과 같은 새로운 미래의 가치로 연결짓는 부단한 회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 1) 본 원고는 필자의 2015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집담회 <가능한 꿈의 공간들 - 여성인권, 기록과 기억의 공간을 위하여> 발표 원고를 일부 수정, 인용하였다.
- 2) '살림'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창립자인 정경숙의 <완월동 여자들>(산지니 출판사, 2020)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 3) 그밖에 개념미디어바삭, 호랑이출판사, 연구모임 아프콤, 생활예술모임 곳간 등이 등 지역의 여러 인문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가 전시와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기획도서

오재환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시작하며

부산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정의 과제를 담은 기획도서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미친 사회적 충격을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지자체 최초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기획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사회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뉴 노멀의 교훈을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는 물론이고, 성장과 축적의 논리에서 소비의 경제 역량도 부각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의 중요성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경제, 의료, 정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때 공동체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일깨워 주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건강한 재구성도 대단히 중요함을 공유했으면 한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시대를 읽고 예견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대응을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

책 구성과 주요내용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1부 '팬데믹 시대의 충격'에서는 감염병이 일상화 되고 있는 21세기의 주기적인 감염사회를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상반된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상반된 이슈로는 비대면 접촉과 공동체의식의 약화, 세계화의 위기와 지역화의 강화, 빅데이터의 활용과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 국가 권한 강화와 분권의 약화, 개인주의의 증가와 집합주의의 쇠락, 기술위위 사회와 감성우위 사회, 사회적 거리 강화와 심리적 거리의 확대 등 기존의 가치들과의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팬데믹의 충격과 위기관리를 위해 코로나 이후의 핵심이슈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Crisis on Economy), 언택트소비의 확장(Online Consumer), 건강공공의료의 추구(Vaccine Society), 자발적 고립과 격차(Isolation & Divide), 재난 공동체(Democracy)로 정리하고 있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의 다섯 가지 예측으로 첫째, '언택' 시대, 경제구조변화에서는 언택소 비로 대변되는 온라인 소비 등 플랫폼 경제의 확산, AI,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의 실현 가시화, 생산기 지 이전 등 공급체계 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 문화관광 수요증가에서는 홈족 문화화 집 족 생활의 일상화, 건강추구형 웰니스 관광과 치유관광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다. 셋째, '거리두기' 공간계 획의 재설계에서는 '나 홀로' 이동수단의 증가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산, 비접촉문화의 확산에 따른 재 택근무와 스마트 워크 증가, 사회인프라에서 접촉 완충 공간 요구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자발적 고립',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발적인 고립의 증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 한 돌봄 증가, 스마트 행정복지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계층 간 정보격차 심화, 가짜정보의 공포심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의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 사로 인한 재난 공동체의 활성화가 역설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생활방역', 공공의료 협력과 연대 확산에서는 건강위생용품 수요의 급증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 공공 보건의료시스템 강화가 예상되 며, 방역과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연대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3부에서는 시민행복을 위한 5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행복을 위한 5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분야 대응과제

50개 과제 중 문화분야 과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 문화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동도서관 스마트 콘텐츠 제공 확대, 온라인 공연전시 확대, 사 회적 거리두기 축제 개발, 공공온라인 강의 플랫폼 개발 및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지역 영상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OTT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기술결합형 공연전시 시장 창출 및 창 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실감형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마무리

우리는 위기의 국면에서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온 부산에서, 중세 페스트 창궐시대, 유럽의 해양도시 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대륙을 넘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 포스트 코로나 문명 을 발신하는 뉴노멀의 테스트 베드이자 발신지로서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한다.

◦ 전년 동기 대비 영화 관람객 증감률(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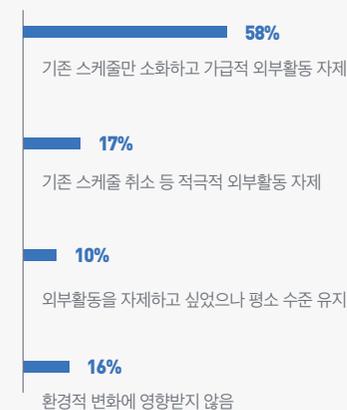
자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pis.or.kr)

◦ 공연 예매건수(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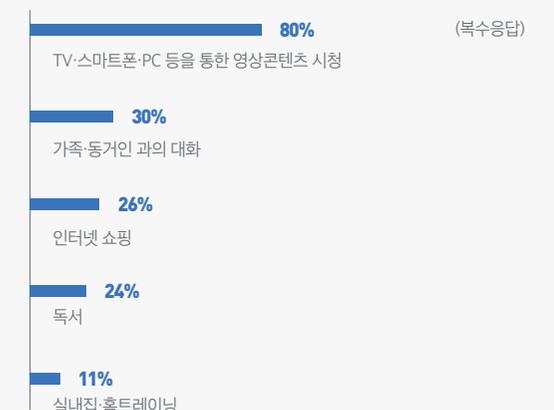
자료: 공연예술통합통합전산망(www.kopis.or.kr)

◦ 환경변화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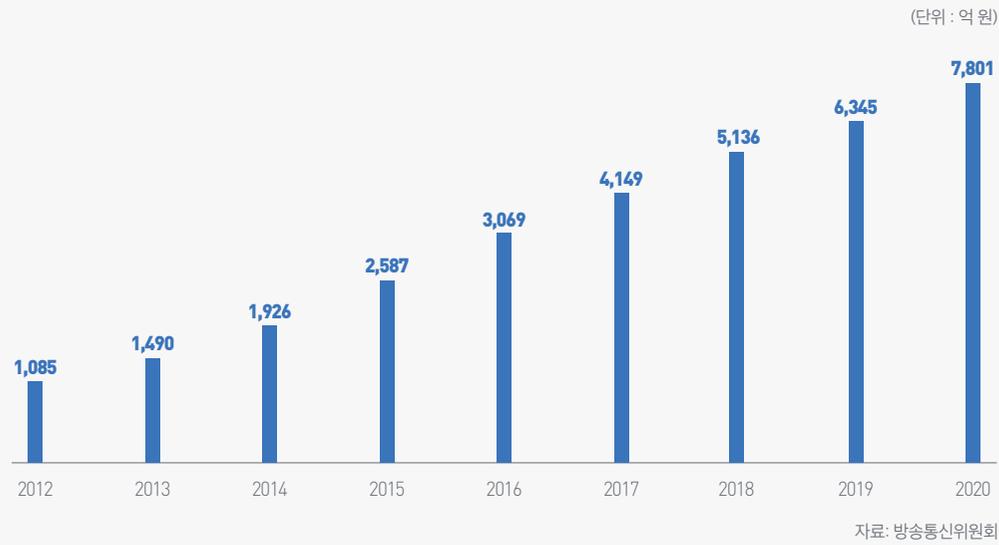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비자형태조사(MCR)보고서(2020.03)

◦ 외부활동 자제경험으로 인한 실내활동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비자형태조사(MCR)보고서(2020.03)

◦ 국내 OTT시장 규모 추이



◦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핵심이슈



Crisis on Economy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AI, 5G, 연결,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 경제구조의 변화



Online Consumer
언택 소비의 확장

비접촉형 언택 소비, 온라인 문화활동 증가, 홈콕/집콕문화 확산, 홈코노미 등



Vaccine Society
건강·공공의료의 추구

스마트 헬스케어, 웰니스 관광, 마음 건강 돌봄, 공공의료시스템, 건강 위생용품 증가, 생활방역



Isolation & Divide
자발적 고립과 격차

외부활동 위축, 디지털 디바이드, 퍼스널 모빌리티 증가, 스마트 오피스, 재택 근무, 접촉 최소화 공간 이용, 온라인 교육



Democracy
재난 공동체

재난극복 시민 연대, 공공정보 신뢰, 국제 연대, 외교 강화, 기부/봉사 확대, 사회적 신뢰와 소통 증가

2020

제7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산형 뉴 리터러시에 관하여

Editor's Letter

칼럼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예술 + 생태

정책보고서 갈무리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디지털 미디어 시대, 영상화를 통한 공연예술의 확장
비대면 영상예술에 대처하는 부산문화예술기관의 자세
온라인 시대 문화예술의 유통방식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유네스코 Culture2030 Indicator 보고서

OTT2

EDITOR'S LETTER

칼럼 [디지털 미디어 시대, 영상화를 통한 공연예술의 확장] p.117

지혜원 (경희대학교 공연예술경영MBA 주임교수)

“창작자의 양성과 신작개발, 예술교육, 국제교류 등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는 공연예술 시장 확대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슈1 -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p.119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향후 부산 문화정책의 화두는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에 대한 지원책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2 - [온라인 시대 문화예술의 유통방식] p.122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CEO)

“온라인 기술은 단지 부가기술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슈3 - [비대면 영상예술에 대처하는 부산문화예술기관의 자세] p.124

양성영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산업교류팀장)
이승진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팀장)
정순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콘텐츠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 뿐 만 아니라, 유통이 되고 어떤 플랫폼에 어떤 기획과 구조물로 제작하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예술+생태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p.128

김정주 (Gachi ART 대표)

“예술로 자연생태를 지키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보고서 갈무리 - [유네스코 Culture2030 Indicator] 보고서 p.132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Culture2030지표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문화이다. 즉 ‘문화적으로’ SDGs를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영상화를 통한 공연예술의 확장

지혜원 경희대학교 공연예술경영MBA 주임교수

글로벌 팬데믹으로 위기 맞은 라이브 무대

2020년 전 세계를 관통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라이브 무대를 매개로 퍼포머와 관객이 동일한 시공간, 즉 ‘지금, 이곳(here and now)’에서 함께 소통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연예술 분야의 타격은 특히 심각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최고수준으로 격상된 지난 2월 이후 다수의 공연이 중단 또는 취소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 5월 이후 조심스레 공연장 문이 다시 열리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다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연장 내 ‘객석 띄어앉기’의 무화가 시행되었고, 이는 공연계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졌다. 작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극장 공연의 경우 객석점유율 70% 안팎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국내 공연시장의 구조에서 객석 거리두기는 공연을 할수록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1월 7일 5단계로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객석 띄어앉기’ 조치가 해제된 공연계는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할 겨를도 없이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얼어붙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공연단체와 예술가들은 갑갑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해외 공연계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뉴욕 브로드웨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공연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런던에서는 1986년 개막 이후 34년 가까이 공연을 지속해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마저 휴지기에 돌입

하는 등 대다수의 공연계는 일시 멈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콘서트, 페스티벌 등 장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렇듯 라이브 무대로 직접 관객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전 세계 공연계는 일제히 영상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공연예술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갑자기 취소된 라이브 공연 대신 기록화된 작품을 공연단체의 웹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버추얼 콘서트 등을 통해 관객과의 단절을 메우는 양상이 눈에 띄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라이브 무대를 꾸준히 생중계해 온 단체들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유료로 서비스하던 “더 맷: 라이브 인 에이치디(The Met: Live in HD)” 프로그램을 “나이틀리 오페라 스트림스(Nightly Opera Streams)”라는 타이틀로 무료 공개했고,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는 유료 상영해 온 “엔티 라이브(NT Live)” 작품을 “내셔널 시어터 앳 홈(National Theatre at Home)”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제공했다. 베를린 필도 유료로 운영하던 “디지털 콘서트홀(Digital Concert Hall)”을 한 달간 무료 공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는 유튜브 채널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공연 팬들에게 제공했고, 유명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Lady Gaga)는 세계보건 기구(WHO),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주체한 온라인 릴레이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들어가며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가장 피해를 보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는 ICT와 실용적 접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예술과 기술의 접목은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다. 2015년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개념인 4차산업 혁명과 함께, 과학 기술과 예술 융합 기반의 새로운 예술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¹⁾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시기이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하듯이, 문화예술의 속성 역시 새로운 것에 도전과 응전의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아니 그 이유를 핑계로 시도해 보지 못했던 ICT와 결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²⁾의 시대 혁신을 이끌어야 할 때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다.

이번 7호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서는 부산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상황을 한번 점검 해보기로 한다. 대상을 예술가와 공공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로 나누어 ICT 기반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기관별 협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지역 내 온라인 뉴 미디어, ICT, 영상 전문 기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으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재)영화의 전당, IC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대표적이다. 영상관련 다양한 교육사업과 작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유관 기관들의 관련 사업도 두드러진다. 특히, 각 기관별 분야별 입문에서부터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관련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드론 실사VR을 이용한 언택트마케팅, 빔프로젝터 기반 인터랙티브 영상콘텐츠 제작연구, 3D 그래픽아티스트과정, lot&AI 융합 영상 콘텐츠 제작, 5G 기반 VR 콘텐츠 제작 등 영상분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비대면 예술의 작품 구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약 1억2천790만 달러(약 1천 558억원)의 기부금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씩 온 스크린(SAC On Screen)”으로 공연 영상화 사업을 진행해 온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남산예술센터, 경기아트센터,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등 다수의 공연단체들이 작품 영상을 공개했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단체가 무관중 공연을 진행해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라이브 무대의 공백을 채웠다.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공연계는 점차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의 유료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특히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관객층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는 뮤지컬 부문에서는 “모차르트”, “잃어버린 얼굴 1895”, “어쩌면 해피엔딩” 등의 작품이 실황 녹화한 공연을 온라인 스트리밍 관람 티켓을 유료 판매했고, “귀환”과 “광염소나타”는 라이브 무대의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영상 제작의 퀄리티의 보완과 배우의 팬덤에 의존하는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지만 공연예술의 새로운 시장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시도이다. 한편, 공연을 웹 콘텐츠로 옮겨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예술의전당은 숏폼 연극 콘텐츠인 “플레이 클립스(Play Clips)”를 통해90분 분량의 작품을 40분으로 압축해 5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선보였고, EMK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적 MCN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함께 웹 뮤지컬 “킬러 파티(A Killer Party)”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AR, VR 등을 활용한 실감형 공연 콘텐츠 제작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과 콘텐츠의 접목 시도에 머물고 있다.

미디어가 매개하는 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연계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공연 영상화 사업의 기반이 약한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무엇보다 라이브 무대를 영상으로 옮길 때 세부 장르와 양식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완성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 기반도 필요하다. 라이브 무대의 물리적 제약과 ‘비용질병(cost disease)’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상의 장점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문 배급사 또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기능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수용자를 타깃으로 공연 기반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시장 확대가 요구된다. 단순히 라이브 무대를 영상에 담아내거나 웹 기반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양성과 신작 개발, 예술교육, 국제 교류 등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는 공연 예술 시장 확대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은 전통적인 공연관객을 넘어서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수용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디지털 환경이 익숙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라이브 무대에서 미디어 플랫폼을 매개로 확장하는 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많은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연계의 다각적인 전략과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상 및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영상 교육 프로그램 역시 초급자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예술가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수강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기관별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따로 따로'에서 이제는 '따로 또 같이'를 부산 문화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관련 유관 기관들을 중심으로 기관별 ICT 기반 비대면 문화 사업 현황 공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각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면" 모임의 장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기술적' 특징점을 분석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지역 예술가들에게 제공, '창의적' 구상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 협력을 위한 조직화 단계로 가칭)부산형 비대면 문화예술 creative team을 구성,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대면 문화예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주지하다시피, 부산에는 각 전문 기관들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어 예술가들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강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을 수강한 예술가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작품제작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의 활용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강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들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다양한 관련 학습 해커톤 모임을 지원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 의한 온라인 미디어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과 교류라는 동료 학습(peer learning)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에 의한 자발적 운영과 지식 공유야 말로 그 어떠한 교육 보다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문화행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교육의 기회를 지역문화 민간 생태계에도 개방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문화재단은 재단이 보유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관련 교육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ICT 활용,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은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2)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轉換]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문화예술기관 직원들의 ICT 리터러시의 중요성

공공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 영화의 전당, 문화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들의 ICT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교육 체계 구축 역시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2020.6.9)에 따라 공공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 역시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문화행정을 실시해야 한다.³⁾

특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직원들의 ICT, 빅데이터 관련 전문 지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문화 전반에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나, 이쉽게도 저장만 할 뿐, 심지어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측정 및 수명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수많은 데이터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규모의 확장을 고려하여 전담 부서 설치 필요성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향후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빅데이터 IT 지식, 통계학적 지식, 문화예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창의적인 직무능력이 특히 요구될 것이다.

부산 문화정책 화두로서의 새로운 시도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의 기회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특성인 '창의(creativity)'를 통해 어려운 시기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비대면 예술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대면으로 복귀한 문화예술 생태계에서의 활동이든, 혹은 비대면 형식이 더욱 활성화되든 분명히 문화사적으로 새로운 창조영역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부산 문화정책의 화두는 문화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시도에 대한 지원책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온라인, 뉴미디어 지원 사업비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지역의 온라인·뉴미디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대면 온라인 뉴미디어의 데이터 창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차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을 융합하는 사업 활성화 역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4차산업 핵심기술 사용의 가치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라는 측면으로 설정하여 애드보커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온라인 시대 문화예술의 유통방식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CEO

온라인 문화예술은 다른 영역임을 인식해야

코로나-19로 기존 문화예술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한창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지만, 해당 결과물의 유효성에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해당 콘텐츠들의 조회 수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더 적나라해진다. 이제는 온라인 문화예술이 기존 문화예술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100여 년 전 루미에르 형제로부터 시작된 영화산업은 이미 연극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 영화는 단순히 연극 등의 동작을 찍는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영화감독과 연극 연출가는 전혀 다른 기술과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잘나가는 연극 연출가가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하면 아마 누구나 말릴 것이다. 단순하게 전달 매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달 매체의 차이는 제작부터 홍보, 실행까지 수없이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온라인의 핵심가치는 구독자(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콘텐츠는 이미 기존 TV나 라디오 콘텐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필자 역시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매력에 빠져 요즘은 굳이 TV 리모콘을 찾거나 라디오를 켜지 않는다. 유튜브나 팟캐스트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단순히 기존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로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좀 더 알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쟁력은 영상 자체라기보다는 영상을 매개로 한 구독자(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핵심 콘텐츠이다.

전달 매체가 달라지면 그 매체의 핵심가치도 달라진다. 연극의 핵심가치가 무대 위 행위의 현장성에 있다면, 영화는 행위를 사각 프레임에 담아내는 영상에 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핵심가치가 있다. 고객들은 그 핵심가치에 완전히 매료되어야만 그들의 시간을 할애한다. 눈에 보이는 장면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된 가치는 전혀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기존 문화예술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는 문제로 다시 눈을 돌려보자. 이것은 마치 연극을 제작하던 연출가를 영화감독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연극계의 베테랑 연출가라도 영화라는 콘텐츠에서는 영화제작의 기본부터 새로 배워야 할 것이다.

온라인예술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문화예술인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전달방식과 가치가 달라서 전혀 문화예술로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문화예술이란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는 문학·음악·과학·여행·역사 등이 혼재된 양식이 많으며, 아직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콘텐츠도 많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 영역을 온라인 영역으로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온라인 영역을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으로 자각하고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나 좁은 관점으로 문화예술을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로컬 문화예술 정보의 유통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따로 진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기존 오프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어떻게 진흥하는가에 달려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콘텐츠는 그 핵심가치가 현장성에 있다. 따라서 온라인 기술의 결합도 현장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현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360° 영상이나 증강현실과 같이 기술의 접목을 떠올리겠지만 아직은 이들 기술이 오프라인의 현장성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변화의 초점을 온라인 영상이라는 콘텐츠 형식 자체에 맞추기보다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초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즉, 홍보하고 모객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작고 다양한 숙박 시설과 여행 정보를 알리는 데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여행 정보 플랫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의 여행산업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제는 숙박 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하드웨어 정보에서 벗어나 체험·활동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로컬 중심의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은 여행 정보 플랫폼 등과 같은 타산업의 정보 플랫폼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모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누군가는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뮤지컬이나 콘서트 같은 정보는 담고 있지만, 로컬의 작고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하다. 호텔스닷컴과 같은 호텔정보 플랫폼이 있었지만, 에어비앤비가 나타나 숙박업계를 바꾼 방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온라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개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로 지자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농사꾼이나 어부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데는 능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트랙터나 어선을 만드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 분야의 요구를 잘 아는 것과 그 요구에 맞는 도구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농사꾼과 엔지니어가 만나고 협업해야 제대로 된 트랙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농부가 자금을 마련해 설계도를 그리고 직접 제작을 맡는 격이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트랙터가 나오기 힘들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문화예술과 온라인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온라인 기술은 단지 부가기술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온라인 기술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비대면 영상예술에 대처하는 부산문화예술기관의 자세

이번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서는 모두가 준비 없이 맞이한 코로나 상황에서 부산의 문화예술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비대면 영상예술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접점을 찾아보려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날에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정순영 시청자사업팀장, 부산영상위원회 양성영 영상산업교류팀장, 영화의 전당 이승진 시네 마테크팀장,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조정운 센터장과 김예인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김가영 인턴이 기록하였다.



부산문화재단 배움방

코로나를 만난 각 기관들의 상황

조정운 먼저 올해 코로나 상황을 맞아 각 기관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한다.

정순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일반 시민이 방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제작지원, 시설 및 장비 대여, 센터 시설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컸다. 센터의 시설과 강사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였고 학교나 공공기관 등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는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진 영화의 전당은 공연장, 영화상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제작 실습 위주의 강좌들이 많다보니 역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경험 속에서 문화적

기획을 가지는 공간의 기회가 소멸되는 것을 지양하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대면 콘텐츠의 접근성 부분에서는 비대면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 수준을 넘어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이미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여러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양성영 영화촬영지원기구로 설립된 영상위원회는 촬영 스튜디오, 장비대여, 독립영화지원, 영화관련 교육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극장이 영화 유통의 창구인데 사람들이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현장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OTT 서비스와 같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국내 드라마에 대한 투자와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산이 서울보다 비교적 안전해 촬영 팀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다. 비대면 유통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 분야는 활성화되고 상업극영화는 많이 위축되었다.

1) OTT 서비스(영어: Over-the-top media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된 현장의 목소리

양성영 최근 인상적이었던 것이 뮤지컬 연출가와 제작자가 뮤지컬을 극장에 올릴 수 없으니 영상화하고 싶는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은 사례가 있었다. 부산문화회관도 콘텐츠를 영상콘텐츠화 하는 지점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부산과 OTT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화PD, 해외마켓 관계자, 영화관련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모여서 코로나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정운 코로나 이전에도 지역의 예술가들이 영상위원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가?

양성영 아쉽게도 영화 이외의 분야가 영화와 접목하여 활동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승진 영화의 전당은 운영비 규모에 비해 지원 사업비가 크지 않아 대부분 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최근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VHS, 6mm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의 독립 영화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정운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육을 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었는가?

정순영 비대면 상황에서 사례로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창원국악관현악단에서 국악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왔다. 창원의 국악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교육용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비대면 국악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연결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영상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안

정순영 센터는 강사들의 비대면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영화영상 및 미디어 분야 외에 예술분야의 강사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정말 필요한데 개인역량에만 맡겨둔 상황이 많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필요한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승진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 팀장

이승진 영화의 전당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방식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강사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르게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화 외에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영화를 인문학 계열로 본다면 차세대를 올바르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영화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영화를 포함해 다른 관점들을 계속 열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중이다. 올해는 이러한 목적으로 비키와 국제포럼을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다. 향후 해외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정윤 기술력을 기관에서 제공하면 예술가들이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승진 가능하나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영화의 전당에서 장비나 제작 인력을 보낼 수는 있어도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콘텐츠를 올릴 플랫폼이 필요한데 각 기관 및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땅히 없다. 포괄적 플랫폼이 있고 각 기관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우선시 된다면 콘텐츠 개발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양성영 콘텐츠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 뿐 만 아니라,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어떤 기획과 구조물로 제작되어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예술가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 선행된 사례를 가진 예술가들 초청하거나 세미나 형식과 같이 예술가들이 서로의 방식을 공유하고 발전해가는 방식도 좋은 것 같다.

정순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미디어 제작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성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순영 현재 센터에서는 일반시민 교육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교육하는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는

정순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업팀장



요청이 있어 각 기관들과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원한다면 협업을 해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제작하고 있다.

조정윤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취합하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양성영 유통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예술인들이 만든 것들을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이승진 기관협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는 기관 공유의 한계가 있어 어느 기관에 속하지 않은 채널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김예인 오늘 대부분 언급한 현장의 예술가들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

정순영 센터가 미디어교육기관이다 보니 대상에 관계없이 미디어 교육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양성영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산업교류팀장

이승진 부산문화재단에서 선도적으로 종사자가 지녀야 할 자세,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방법 등 문화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조정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각자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많이 확인한 것 같다. 향후 실현가능한 부분들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김정주 Gachi ART 대표

플라스틱의 역할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쓰레기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물건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쓰레기는 계속해서 생겨난다. 심지어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쉽게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턱대고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악취, 유해물질들로 대기가 악화되고 토양과 수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물건을 살 때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사고 나면 오래 쓰도록 하고 쓸 만 하지만 안 쓰게 된다면 필요한 다른 사용자에게 전해져야 한다.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으로 재사용 되어야 하고 최종으로 버릴 때는 분리수거로 자원순환의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50년이 되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바다에 물고기 수보다 더 많은 시점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¹⁾ 천일염 그리고 물고기와 조개류 내장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며 각질제거를 위한 세안용 스크럽화장품이나 바디워시, 치약



출처: KBS [KBS스페셜-플라스틱 지구]

속에 넣은 죽음의 알갱이라 불리는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도 문제이다. 바다로 흘러가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풍화작용과 자외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부서지면서 지름 5mm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 북극의 해빙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양 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과 조각들을 먹이인 줄 알고 먹는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플랑크톤에서부터 해양 포유류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닥치는 대로 섭취하며, 각종 플라스틱계 쓰레기를 먹고 소화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동물들이 매년 발견되며 결국 먹이사슬로 연결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도 위태롭게 한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1) 엘런맥아더재단과 맥킨지경영·환경 센터 2016년 공동연구보고서

Gachi Beach Combing·Plogging (같이, 가치 비치코밍·플로깅)

GachiART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과 같이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같이 창조 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아트로 친환경, 자원순환 그리고 가치 있는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지난 2010년 부산문화재단의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생태·환경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지역학습, 주변의 동식물이름과 특성, 공생공존의 방법 그리고 착한낚시 프로그램(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생태에 방해가 될 해양쓰레기를 수거 하는 낚시대 제작)을 계기로 해양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이 모여 매년 비치코밍을 하게 되었다. 2018년 공레이 태풍의 여파로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해결하려 30여명이 같이 했다. 가치 있는 일로 의미는 있지만 시민의 노동에 문화예술서비스 같은 보상이 필요했다.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으로 가덕도를 중심으로 10여 차례 매년 70여명의 시민들과 지역을 연구하고 탐방하며 비치코밍 진행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 후 현장에서 예술가들과 리사이클링 아트 체험 그리고 음악공연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시간을 제공하여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으로 부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장르의 19개 문화예술단체와 네트워크 하여 부산의 포구를 중심으로 예술단체가 활동하는 권역별로 'Gachi Beach Combing·Plogging' (같이·가치 비치코밍·플로깅)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 속 문화로의 정착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실천 해주어 감사하다. 회를 거듭할수록 동참하는 시민은 증가 했지만 부산의 해안가는 너무 길고 해양쓰레기는 너무 많다.

비치코밍(BEACH COMBING)은

해변(beach)을 빗질(combing)하듯이 해서 조개껍데기, 나뭇조각(流木)등의 표류물이나 간혹 휴가철 잃어버린 반지, 목걸이, 팔찌, 동전들을 주워 모으는 것이었지만 요즘엔 플라스틱 조각, 씨글라스, 스티로폼, 비닐, 담배꽂초, 어구, 낚시를 하다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 환경정화는 물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인 줍다(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 담는 운동이다.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런지나 스쿼트 동작과 비슷해 색다른 피트니스로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실제로 조깅만 했을 때보다 플로깅을 하면 50칼로리를 더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 한국에서는 '줍다'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고도 불리지만 국립국어원의 새말모임에서 플로깅을 '쓰담 달리기'라는 예쁜 우리말로 대체어를 정했다고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인류가 지구의 자연, 환경, 기후와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킨 탓에 인류가 파멸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를 지질학적으로 인류세[Anthropocene , 人類世]라고 한다. 인간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좀 편하자고 너무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자연생태계파괴, 대기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유전자 변형, 토양 및 수질 오염, 과잉생산으로의 쓰레기 발생. 우리가 후세에 남겨줄 유산은 변종 바이러스와 썩지 않는 쓰레기 일지도...

문화로 예술로 환경오염을 줄이며 변화시킬 수 있는 고민과 행동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예술을 하고자 인생이 더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건강은 물론 제작과정에 공해를 일으키는 재료들이 많다. 꼭 사용해야 될까? 미술대학에선 재료학적 연구로 오브제의 부착, 내구성, 견뢰도, 발색, 변색 방지 등을 위해 접착제, 화학약품코팅제, 매염제, 용매제 등을 작품의 특별한 표현기법의 발현과 작품 생애주기를 더 하기위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표현과 보존을 위해 지도해왔고 작가들도 예술을 위해 무분별 하게 사용하고 있다.

카드늄, 코발트, 수은, 비소, 크롬, 납...등의 안료로 만들어진 물감, 납 성분으로 된 튜브에도 환경유해물질이 노출되어 있고 조형작업의 스티로폼[styrofoam], FRP [섬유강화플라스틱, fiber reinforced plastics]소재로 작품제작 시 유해가스 등 환경호르몬, 미세플라스틱 분진발생으로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며 백혈병 유발과 폐암등 발암가능성이 있으며 각종 피부염, 중추신경계 손상과 근육이완, 간, 신장기능, 면역계에 치명적이고 성조숙증과 생식기 기능에 영향을 주어 정자감소, 태아발달의 악영향과 기형유발 가능성을 경고한다.

예술가들은 공해유발의 재료를 쓰지 않는 자연친화적 재료로 예술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작품관람에 이작품은 친환경적 일까? 소재, 표현기법의 적절성을 우선 따지는 감상의 버릇이 생겼다.

공해를 일으키고 자연생태계를 교란 시키며 작가 자신의 건강에도 해로운 예술이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생활 속 폐자원과 비치코밍, 플로깅으로 주워 모은 표류물과 쓰레기를 미술 재료로 하는 자원순환의 리사이클링(재활용) 아트 그리고 쓰임과 가치를 더한 업그레이드 된 리사이클링의 업사이클링(새활용) 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공유할 아트프로젝트가 절실하다. 예술로 자연생태를 지키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Gachi ART Workshop



Gachi Plogging



Gachi ART Workshop



Gachi ART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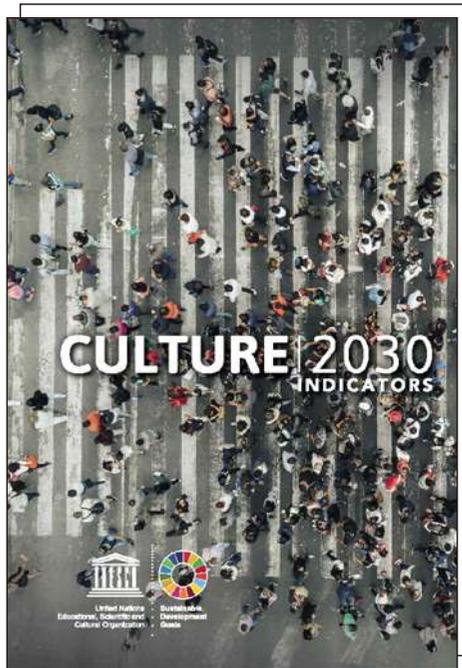
Gachi ARTalk Concert



Gachi ARTalk Concert

유네스코 Culture2030 Indicator 보고서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culture2030 indicator보고서 표지

시작하며

2015년 채택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사회발전에 있어 누구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구성된 전지구적 실천구약이다. 문화 분야에서도 2019년 11월 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문화부장관 포럼을 계기로 SDGs 이행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Culture2030 지표를 개발 선포하였다. SDGs 목표 중 문화가 실질적으로 언급된 과제는 SDGs 11 목표 4인 '세계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이다. SDGs 내에 문화예술의 지분(?)이 적다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culture2030지표를 보면 사회 전반의 발전 기제로서 문화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표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지표 설정에 대한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를 중심으로 OECD, World bank, Eurostat, Habitat 등 문화통계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통계기관 등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및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4가지 주제

차원과 22개의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지표는 기존에 생산되었던 타 분야의 데이터들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 단편적으로 생산되었던 각종 데이터들을 문화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4개의 영역 22개의 지표

culture2030 지표는 '환경과 회복 탄력성', '번영과 생활',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라는 총 4가지의 주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과 회복 탄력성'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출과 관리, 기후적응과 회복탄력성, 문화시설, 문화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점검한다. '번영과 생활'에서는 GDP 내 문화 비중, 문화고용, 문화산업, 가계지출, 문화 분야 무역 및 공공재원, 거버넌스, '지식과 기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문화적 지식, 다중언어 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적 트레이닝을 세부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참여' 영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 예술적 자유, 문화접근성, 문화참여, 참여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SDGs 5영역인 성평등과 17. 글로벌 파트너십은 특정 지표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culture2030 지표체계 전반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측정대상은 국제 단위, 국가, 도시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마다 연계되는 SDGs 지표가 명기되어 있으며 지표별 특성을 살려 통계수치 혹은 체크리스트, 거리 측정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문화의 역할 확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culture2030지표는 이제 실질적인 조사과정을 준비 중이다. 2020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27개국 4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의 방법론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지표 이행을 위한 자료 수집과 각종 지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도 곧 발표될 2020년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의 각 지표마다 연계 가능한 SDGs영역을 도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도 재단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사업과 SDGs와의 연관성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역의 문화현상을 지속가능이라는 프레임으로 관찰하고 타 영역과의 연결지점을 찾기 위한 시작점인 셈이다.

지표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Culture2030 지표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문화이다. 즉, '문화적으로' SDGs를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발전계획 속에 문화영역을 담아내는 것을 성과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회발전계획 전반에 문화적 관점과 프레임이 담겨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문화라는 프레임이 인류사회 전반에 순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UNESCO Culture2030 Indicator (2019)

개발 주체 | UNESCO

개발 시기 | 2019

지표 구성 | 총 4개의 영역(dimension)과 22개의 지표로 구성

지표 특징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천을 위한 문화영역 주제별 지표
-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생활,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 총 4개의 영역에서 총 22개의 지표로 구성
- 5. 성평등 영역과 17. 글로벌파트너십은 지표 전반에 적용

환경과 회복력

-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노력 수준을 평가
- 공공 공간 및 문화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공간적 평가

지표명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3.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4. 문화시설
5. 문화를 위한 열린 공간

SDGs 연관과제

- 2.4 지속가능한 식량 제공 및 경영
- 6.6 물 관련 생태계
- 9.1 양질의 인프라
- 11.4 문화 및 자연유산
- 11.7 포용적인 공공장소
- 12.b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 13.1 기후 및 재난 복원력
- 14.5 해양지역 보전
- 15.1 지속가능한 지상 생태계
- 16.4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번영과 생활

- 경제의 주요 측면(GDP, 무역, 고용, 기업, 가계 지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 평가
- 문화거버넌스 관련 지표

지표명

6. GDP로 보는 문화
7. 문화 분야 고용
8. 문화산업
9. 가계지출
10.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 무역
11. 문화를 위한 공공재정
12. 문화 거버넌스

SDGs 연관과제

- 8.3 직업, 기업가 정신 및 혁신
- 8.9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 8.a 무역 원조 증가
- 10. 무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
- 11.4 문화 및 자연 유산

지식과 기술

- 지역문화 가치, 지식 및 기술 구축에서의 문화의 기여도 평가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가치 전달, 문화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평가

지표명

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14. 문화적 지식
15. 다중언어 교육
16. 문화예술교육
17. 문화 트레이닝

SDGs 연관과제

- 4.4 고용 기술
- 4.7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 8.3 직업, 기업가 정신 및 혁신
- 9.c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 12.a 지속 가능한 소비
- 13.3 기후 적응 교육

포용과 참여

- 포용과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결속력 구축에 있어 문화의 기여도 평가
- 공공 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의 기능 평가

지표명

18. GDP로 보는 문화
19. 문화 분야 고용
20. 문화산업
21. 가계지출
22.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 무역

SDGs 연관과제

- 9.1 양질의 인프라 / 공정한 접근
- 9.c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 10.2 사회적 포용
- 11.7 포괄적인 공공 장소
- 16.7 참여적 의사 결정
- 16.10 기본적 자유
- 16.a 폭력 예방
- 16.b 차별 금지 정책

발행일: 2020.12.18. | 발행인: 강동수 |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7 www.bscf.or.kr | 편집위원: 송교성 송진희 이지훈 차재근 | 편집기획: 조정윤 김예인 원향미
디자인 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